



Center for Future Warfare Studi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전 연구센터 워킹페이퍼 No. 61 (발간일: 2020.12.11.)

‘코로나 19’ 사태 이후 미·중 관계 변화와 한국의 동맹전략 발전 방향

장호영 군의무학교

〈차 례〉

- I. 서론
- II. ‘코로나 19’ 사태 전 미·중 경쟁
 - 1. 중국의 부상
 - 2. 미·중 전략경쟁
 - 3. 미·중 전략경쟁의 함의
- III. ‘코로나 19’ 사태 중 미·중 경쟁
 - 1. ‘코로나 19’ 관련 미·중 역내 갈등
 - 2. 미·중 패권경쟁
- IV. ‘코로나 19’ 사태 후 미·중 경쟁
 - 1. ‘코로나 19’ 사태 이후 미·중 경쟁 구도 변화
 -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동맹전략 발전 방향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된 동북아 지역의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미 동맹의 전략적 역할 모색에 있다. 최근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코로나 19’ 관련 역내 갈등 심화로 인해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 아베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에 따른 ‘보통국가화’와 러시아의 외연확대 정책은 동북아 안보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의 세계질서 전망 보고서인 『Global Trends 2025』에 의하면 2025년 이후 국제질서가 더욱 복합적으로 변하고, 국제질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 국가의 등장과 세계화, 경제발전, 인구증가, 지역적 격차 등으로 인해 더욱 다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하였다.¹⁾

여기서 주목할 것이 급변하는 미·중 관계와 이를 둘러싼 한국의 전략적 동맹전략의 발전 방향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중국 봉쇄정책에 올인(all-in)하고 있던 미국은 기존 정치권보다 더욱 강경한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리즘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국가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정책이 대두 되면서 경제와 안보분야에 대다수의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었다. 이러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으로, 이는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국익을 위해 최우선적 과제로 ‘미국의 재건’을 강조하면서, 그 출발점은 미국 내부의 경제 활성화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군사개입 축소, 동맹 및 우방국들의 방위분담 확대,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몽(中國夢)’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적 패권국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우 공세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발간된 중국 『국방백서』에서도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에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건설, 건국 100주년(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국가 전략목표로 제시하며 “그것은 강군의 꿈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군사력 증강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²⁾

2020년 5월 22일 중국의 코로나 여파 속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3차 연례 회의가 열렸는데 중국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 6.8%로 약 반세기 만에 처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올해 국방예산은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전년 동기 대비 6.6% 늘린 1조 2천 680억 500만 위안(약 216조 6천억원)으로 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군사력 증강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는 지난 500년간 어떠한 강대국도 강대국 지위에 진입하게 되면 자국의 힘을 더욱 증강시켜 체계를 지배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존 패권국과 갈등 혹은 전

1)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8. “Global Trends 2025 : A Transformed World”,
https://www.dni.gov/files/documents/Global%20Trends_2025%20Report.pdf(검색일: 2020. 09. 10).

2)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北京: 人民出版社, 2015).



쟁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중국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본다. 중국은 분명 지역 패권국이 되고자 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견제하고 지역균형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미·중 간 갈등 혹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³⁾

힘의 변화와 질서의 변동은 진행형이다. 미국의 상대적 약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부터 처음 시작된다.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이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내재적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연평균 9%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강대국으로서 국제적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제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새로운 미·중 관계 설정은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안보·경제 전 분야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⁴⁾

이렇듯, 최근 미·중 갈등과 대립은 양국 간의 역사에서 미증유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다. 2018년 미국에 의해 촉발된 무역전쟁에 이어 2020년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진원지를 둘러싸고 양국 지도부 간 거친 설전이 오갔고, 국제 방역체계와 백신 개발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⁵⁾ ‘신 냉전’이란 표현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로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을 방불케 하는 전면적 경쟁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다.⁶⁾

“코로나 19는 지금껏 봐온 어떤 것보다 미·중 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세계안보연구소 ‘갈 루프트’ 공동소장이 ‘코로나 19’ 사태로 미·중 간 관계 악화를 예측하며 이렇게 언급까지 했을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미·중 갈등구조 속에서 ‘코로나 19’ 사태 전·중·후 양국 간의 변화된 관계형성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미·중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모색하여 경제와 안보라는 동맹전략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코로나 19’ 사태 전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부상에 대한 배경과 그에 따른 미·중 경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그동안 40년에 걸쳐 중국을 포용하면서 전략적 협력에 기반 하여 국제사회로 끌어 들이는 전략을 취했었다. 이렇게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중국은 전 세계 경제의 ‘Supply Chain’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 형성된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입각한 전략경쟁의 함의를 도출하고 패권경쟁의 초입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다.

둘째, ‘코로나 19’ 사태 중 미·중 양국의 안보환경 변화를 전통적 관점이 아닌 ‘코로나 19’

3) John J. Mearsheimer, 2006.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105(690), 160-162.
Hochul Lee, 2012. pp.26-27.

4) 주평 저·이상원 역(2012). 『국제관계이론과 동아시아안보』. 성남: 북코리아, p.534.

5) 권유진, 2020. “첫 개발국이 패권 잡는다, 미·중·EU ‘백신 전쟁.’” 『중앙일보』(5월 18일), 1.

6) 미·중 신 냉전 가능성을 분석한 최근 글들은 다음과 같다. Hunter Marston, “The U.S.-China Cold War Is a Myth,” *Foreign Policy*, September 6, 2019; National Public Radio(NPR), “[Greg Myre]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A Cold War?” 2019. 9. 9; New York Times(NYT), “[Niall Ferguson] The New Cold War? It's With China, and It Has Already Begun,” 2019. 12. 2.



와 관련된 역내 갈등 및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미·중 관계에서 안보 위협의 근원적 요인으로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 북한 핵·미사일과 사드배치 등이 문제였으나, ‘코로나 19’ 사태 이후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미·중 안보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동아시아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코로나 19” 사태 후 예측되는 미·중 경쟁구도의 추세와 한국의 동맹전략 발전 관련 외교안보적 함의에 대해서 모색 하고자 한다. 현재 북한의 군사적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한·미 동맹관계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미·중 긴장관계를 악화시켰고, 한·미 동맹의 구조적 관계에도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반면 한·중 관계는 중국의 ‘영향권 전략’으로 연대를 조성하며 개선되고 있다. 한국이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간 어떻게 관계가 변화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한 한국의 동맹 전략 가치가 어디에 내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한국이 직면한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안보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의 바람직한 외교·안보적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논문의 시간적인 범위는 탈냉전 이후부터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한 지금까지의 20여 년 간의 기간이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 이후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에 변화를 주게 된 미·중 관계의 구도 변화와 한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의 동맹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 초점을 맞춰 연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주제에 대한 최선의 연구 방법으로 통시적 의미를 문헌 기술적 방식으로 분석을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양국의 전략적 핵심 이익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양보나 타협 보다는 갈등과 경쟁의 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핵심 이익은 북한의 핵문제나 대만문제 및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동중국해 문제 등이 해당할 것이며, 이에 대한 미·중 간 경쟁은 전략 경쟁에서 패권경쟁까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19’ 사태를 시작으로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패권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19’ 종식 후 패권경쟁에서 미·중 간 어떤 국가가 어떤 부분에서 국제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남·북 관계는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도 그렇지만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도 미·중 패권경쟁은 격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 패권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도전만이 자국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향후 미국과 중국, 어느 국가에서도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로 북한의 ‘비핵화 이슈’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고, 실종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



한 시국에 북한도 대외정책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가질 것이고,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 핵을 어떠한 수단으로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고,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추세에서 더 어려운 외교안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현재의 동맹 전략이 가지고 있는 안보 딜레마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중 간 갈등 구조에 따른 변화된 동북아 안보 환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외교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쟁점과 과제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대미, 대중 외교안보 전략 구상과 한국의 동맹전략 발전 방향에 대해 ‘코로나 19’ 사태 변수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코로나 19’ 사태 전 미·중 경쟁

1. 중국의 부상

중국의 부상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나타난 대외전략은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반하는 움직임은 삼가 하면서 미국과 함께 상호 전략적인 경쟁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된 힘을 동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뜻의 ‘중국몽’ 같은 시진핑 체제의 아젠다가 출현하게 되고, 현대판 실크로드 건설 계획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같은 글로벌 물류 전략인 경제권 구상도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2013년 11월 제18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에서 일대일로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공개했다. 2015년 중국국가발전위원회, 외교부, 상무부 공동적으로 “실크로드 경제 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비전과 행동 촉진(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 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을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공개했다.⁷⁾

이렇게 중국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가 전략경쟁에서 패권경쟁으로 그 태세가 전환되게 되는데, 경쟁관계의 구도 변화에 앞서 우선 중국이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정식 선포했다. 그해 말이 되자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굳히게 되었다. 이후, 1966년 5월 ~ 1976년 10월의 10년간은 중국의 ‘무산계급문화대혁명’ 시기였다.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毛澤東)이 잘못 지휘하였으며 린바오(林彪)와 장칭(江青)과 같은 2개의

7) “习近平在印尼国会发表演讲：携手建设中国－东盟命运共同体”，中國一帶一路網，2013.



반혁명단체에 이용당하여 중화민족에게 엄청난 재난을 가져온 정치 운동이었다.”⁸⁾ 이후,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9월에 문화 대혁명에서 ‘후난 성’의 제 1서기가 되어 마오쩌둥의 충실한 부하 역할을 했던 화궈핑이 새롭게 당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화궈핑은 이때 군부 실력자와 협조해 문화대혁명의 주도자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 왕홍원(王洪文), 정치국 상임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 장춘차오(張春橋), 정치국 위원이자 마오쩌둥의 아내인 장칭(江青), 야오원위안(姚文元) 등 이른바 ‘문혁 4인방’을 제거 하였지만, 마오쩌둥이 추진하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면서 ‘개혁개방’이 또 다시 2년이 지연되게 하였다.

이후, 마오쩌둥에 의해 문화대혁명 당시 실각해 박해를 받고 내쳐진 뒤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에 다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정치계에 복귀한 덩샤오핑에게 실권을 빼앗기게 된다. 이때,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에 열린 공산당 회의에서 문화대혁명이 실패함을 인정하고 중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개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게 되고, 당과 국가의 사업 중심이 사회주의 현대화건설과 개혁개방의 전략적 방침을 실현하는 데로 옮겨졌다. ‘개혁개방’이란 대내적으로 정책개혁, 대외적으로 시장개방을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대내개혁은 우선 농촌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마오쩌둥이 ‘인민공사’라는 명목으로 통제해 두었던 농촌 조직을 와해시키고 ‘책임경영계약제(家庭聯產承包責任制)’를 실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시동을 걸기 시작한다. 농촌 탈집단화는 생산의 괄목할 만한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곡물 생산량은 1978년에서 1983년까지 연간 4.2% 성장했고(그 이전 10년간은 연간 3.5%), 1984년에는 4억 7백만 톤이라는 기록적인 수확을 보였다.

‘개혁’ 정책의 기본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말한다. 시장 경제의 운용이 가격의 변동에 기초하고 있듯이, 먼저 생산물의 질과 상대적 희소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던 중국의 합리적이지 않는 가격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했다(예컨대 에너지는 세계 시장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제공되고 있었다). 점진적인 가격의 자유화는 개혁의 중심이 되었고 개혁을 조건 지우고 있었다. 금융, 재정 제도에 관한 일련의 모든 조치들은 가격 자유화와 결부되어 있었고 정부의 기능을 재규정했다. 정부는 이제 거시 경제 수준의 일정한 조정 외에는 개입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힘과 권리가 주어졌다. 개혁의 실시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뒤따랐다. 국유기업들의 재정 조달 방식이 바뀌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은행 대출로 대체되었다. 수익 전체를 국가에 납부하던 것이 세금 납부로 변화했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공업 생산 가치는 미화 약 350억 내지 400억 달러의 성장을 보였다. 가장 괄목할 만한 결과는 경공업에서 나타났다. 탄광업, 철강업 등 중공업도 속도는 이보다 느렸지만 마찬가지로 성장해 갔다.

외국의 기술, 상품과 자본을 향한 중국의 개방은 4개 현대화 정책이 국제적 차원에서 표현된 것이었다. ‘개방’은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개혁’과 마찬가지로 최고 수뇌부의 정치적인 결정으로

⁸⁾ 百度百科. 20116. “文化大革命,” <http://baike.baidu.com/view/1921.htm>(검색일: 2020. 09. 07).



부터 나온 것이었다. 개방은 중국의 자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가장 선진적인 국가들의 노하우를 단시일 내에 배울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국내의 현대화와 세계 경제로의 진입은 밀접히 연관된 것이었다. 1978년~1985년은 이루어진 개방정책의 결과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 무역 측면에서는 1978년과 1984년 사이에 약 2백억 달러에서 5백억 달러로 성장했다. 중국은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 습득을 가속화시키고 외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1979년부터 푸젠성(福建)의 산터우(汕頭)와 샤문(廈門), 광둥성(廣東省)의 선전(深圳)과 주하이(珠海)에 경제특구를 설립했다. 외국 자본의 투자 활동은 처음에는 합자(合資) 기업 형태였으나 나중에 이루어진 조치들을 통해서 순수 외국 회사의 설립도 가능해졌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당국은 과세 면제, 세금 면제, 기간사업에 대한 재정 보조 등 다양한 유인 조치들을 내놓았다. 1984년 4월 이러한 우대 조치는 '개방 도시'로 선언된 연안 지역의 14개 도시로 확대되었다.⁹⁾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치·경제·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이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중국위협론, 중국붕괴론, 중국 무용론과 같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부상을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파악하기 보다는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중국도 그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감있는 대국이 되어야 한다는 중국 책임대국론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대국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우선 서구와 중국은 책임대국에 대한 개념규정에서부터 인식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구에서는 중국이 책임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체제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그 체제의 규범과 가치, 그리고 규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중국이 국제사회에 점진적으로 융화 내지는 사회화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고 국제적인 기준과 규칙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책임대국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사회를 위한 중국의 변화보다는 중국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사회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행태는 서구가 기대했던 수준과 방향과는 다른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다.¹⁰⁾

2. 미·중 전략경쟁

가. 미·중 전략경쟁의 기원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국제사회에서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라는 서로 대립하는 집단이 형성되게 된다.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이었으므로, 1972년 이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중국에 대해 정치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경제적 봉쇄, 군사적 포위와 외교적 고립 정책을 펼쳤으며,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발발은 미·중 양국의 적대감을

9) 박상수, 2009, 『중국현대사: 공산당, 국가, 사회의 격동』, 서울: 심산, 274-275.

10) 한석희, 2004, "중국의 부상과 책임대국론, 국제정치논총", 44(1), 191.



더 심화시켰다.

그 후 1972년 2월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이 공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방문 중에 “상하이 코뮌iqué”¹¹⁾ 공동 외교 성명으로 발표하며 20여 년간의 미·중 대결이 마무리 되면서 양국 관계는 정상화 되었고 1979년 정식으로 수교를 시작했다. 1972년 미·중 관계가 완화된 배경에는 1969년 중국과 소련이 “보물섬 사태¹²⁾”로 관계가 악화된 이유도 있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완화하여 소련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부합했었으며,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할 수 있었던 결정적 사항은 기존의 구조적 요인 외에도 중국에서의 내부 발전전략의 조정 때문이었다. 중국과의 수교 이후 미국은 좋은 미·중 관계가 소련을 견제하는 것 외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확장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 국제주의 전략”을 펼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수교 이후 양국 내부에는 미·중 관계의 안정을 지지하고 유지해야 할 내부적 수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양국 수교의 가장 중요한 토대와 공동이익이 사라져 관계가 위태로워지게 되는데, 이후 제3차 대만해협 위기, 미국의 유고슬라비아 중국 대사관 폭격 사건, 인권과 최혜국대우 문제에 대해 미국과 논쟁 벌이는 등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요인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미·중 관계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로 규정하고, 양국간의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만 유지해 오던 클린턴(William Jefferson Clinton) 행정부 시절과는 달리 2001년 1월 20일, 조지 워커 부시(George Walker Bush)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로 규정하고 ‘대만의 보호’는 미국인의 의무이자 책무라고까지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911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미국은 테러리즘을 자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하게 된다. 미국은 국제적인 반테러 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미·중 관계는 잠시 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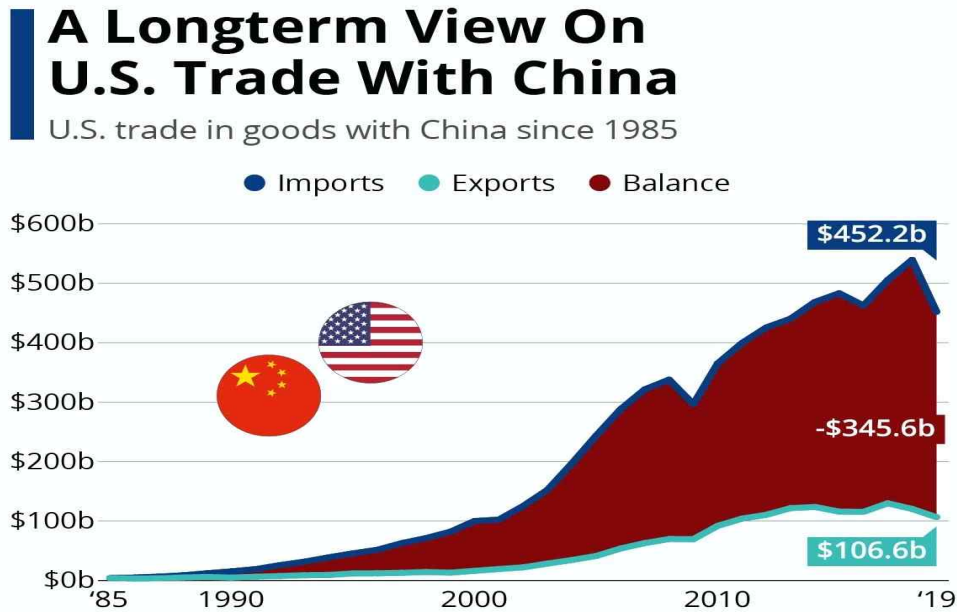
한편, <그림 4-1>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창출된 수익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적자가 증가하면서 미국은 다양한 항목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보다 수입에 대한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중국과의 적자는 미국의 총 무역 적자의 40~50%를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 적자가 미국이 ‘불공정한 발판’에 있다는 주장하고, 중국이 자국 통화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즉, 무역 적자는 그 수요가 미국 생산에서 중국 수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 수준이었던 2004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약 10%에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GDP의 약 6% 수준이 된다. 그러나 중국이 무역 흑자국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무역상대국으로 계산될 때뿐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¹³⁾

¹¹⁾ 상하이 코뮌iqué: 미국과 중국 1972년 2월 28일에 발표한 공동성명

¹²⁾ 보물섬 사태: 중국과 소련 간 보물섬에서의 국경 분쟁

¹³⁾ Felix Richter. 2020. “중국과의 미국 무역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Statista』(2월 6일), 1.

〈그림 4-1〉 중국과의 미국 무역에 대한 장기적 관점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2020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채권보유액은 4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중국이 보유한 미 채권보유액은 불과 780억 달러에 불과해 세계 미 채권보유액의 1/10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7년 중국의 보유액은 5,000억 달러에 달해 다른 모든 국가들의 보유액의 1/4에 달하게 된다. 이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정부는 2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경제위기 재건 비용으로 쏟아 붓게 되고, 중국의 채권보유액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다시 두 배로 증가한다. 2010년 중국의 미 채권보유액은 1조 1,6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전체 보유액인 3조 3,000억 달러의 약 1/3 이상의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중 적자와 미·중 간 경제 불균형은 역사상 유래 없이 매우 크고 깊은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이전에 미·중이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겪었고, 이러한 불균형이 2008년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분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재무부 채권을 다량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은 중국 상품을 점차 많이 소비하고 있었다. 중국은 2000년에서 2008년에 이르는 동안 미 재무부 채권을 5배가량 더 많이 보유하게 되었고, 이는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액수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 적자는 3배가량 증가하여 2,5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중국은 달러를 더 많이 보유하여 인민폐가 평가 절상되는 것을 막았고, 미국의 이자율은 낮게 유지되어 부채에 의존한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



의 상품이 더 많이 소비되어, 중국의 성장률이 두 자리 숫자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고, 결국 경제위기로 상황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¹⁴⁾

이후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때부터 중국은 강대국으로 성장해 미국의 위상에 위협이 되기 시작했으며, 여러 분야에서 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중 관계는 협력보다 전략적인 경쟁에 더 큰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트럼프 시절 미중 무역전쟁 등 일련의 미국의 대중국 강경 대응은 미·중 양국 관계가 전면 경쟁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¹⁵⁾ 미국과 중국은 향후 지속적으로 주변국이 아닌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중국은 ‘핵심이익’, 미국은 ‘사회적 이익’을 강조하며 전략경쟁을 시작하게 된다.

나. 미·중 전략경쟁 사례 분석

1) 시진핑의 ‘중국몽’ 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중국몽’이란 시진핑 체제의 아젠다 중의 하나로, ‘근대 이래로 모든 중국인들이 꾸고 있는 가장 위대한 꿈’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이를 구체적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 정의하였다. 시진핑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정의한 것을 보면 원래 ‘부흥’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쇠락한 상태에서 다시 융성 한다는 것이기에 시진핑은 과거 중화제국의 영광을 다시 되살려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며 이는 시진핑의 대표적인 통치 이념이 되었다. 중국몽에는 국가의 부강, 민족의 진흥, 인민의 행복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추대되면서 ‘중국몽’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시진핑이 처음 ‘중국몽’을 거론한 것은 중국이 30여년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급부상을 하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동시에 대내외적인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면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중국이 당면해 있는 2가지 대내외 문제점은 첫째, 중국은 현재 빈부격차, 동부와 서부,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발전, 관료사회의 부패, 환경오염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경제 발전을 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의 혼란과 공산당 중심의 통치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중국몽’을 내세운 것이다. 둘째, 시진핑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처럼 역사에 남을 혁명을 위한 전투에 참여하여 전쟁영웅이 된 것도 아니고, 장쩌민과 후진타오처럼 중앙 지도부에 의해 발탁된 것도 아니며, 더욱이 인민들의 선거로 선출이 된 경우도 아니다. 공산당 원로였던 아버지 시중선

¹⁴⁾ 전재성. 2012. “2008년 경제위기와 미중관계의 변화, 한국의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1호 5집, 127-128.

¹⁵⁾ 조국봉. 2020. "미중 갈등의 현실주의적 요인과 미래 관계." 동아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36-37.



의 막대한 영향력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 후보 위원 151위의 신분으로 시작하여 치열한 당내 권력 투쟁을 통해서 집권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다양한 세력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그로 하여금 더욱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 및 확대 하도록 자극했고 '중국몽'은 바로 이런 당 내 도전을 극복하고 인민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데 더없이 좋은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을 제기하고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다시 쓰고자 하는 구상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를 다시 쓰고자 하는 시진핑의 중국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중국이 경제와 군사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주변국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진적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한 변수이다. 중국의 당정 문건에 대한 분석이나 정치학자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해서 보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가시화는 시진핑 지도부나 지식인들에게 전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의 기초가 된 민주주의나 자유, 인권 등의 가치나 제도와는 다른 중국식의 정치체제 모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가 보편가치로 수용되고 있는 현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아직 민주제도나 가치를 대체할만한 매력적인 정치체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중국식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에게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협의식을 제고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까지 나타난 시진핑 주석이 구상하는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중국몽) 구상은 주변국들에 수용 가능한 선진적인 민주문명질서로 비치기보다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반한 강권적인 세계질서 구상으로 비치고 있다. 따라서 민주제도나 가치의 실현을 중국몽 속으로 끌어들이어서 정착시키는 것은 향후 중국몽의 실현을 위한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¹⁶⁾

중국몽의 주요 핵심 내용은 애국주의 고양, 시진핑의 정권체제 유지, 권력기반을 강화하여 미국과의 경쟁시 수평적 관계 형성, 중국식 강대국 외교를 통한 국제적 지위 획득, 중국위협론 해소, 패권국가로서 역할과 정체성 확립 등이다. 이러한 중국몽의 핵심에서 권력기반을 강화하여 미국과의 경쟁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점은 미국으로 하여금 도전으로 받아 들여지며 미·중 관계는 협력보다 전략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제45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대선 시절 공약인 "오늘부터 미국의 새 비전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공언함으로써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의 일자리와 국경, 꿈을 되찾아 올 것이며 무역과 이민, 외교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의 군대를 돕고, 국경을 지키면서도 정작 미국을 방어하지 못했다면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워싱턴에 집중됐던 기득권을 국민에게 이양하겠다고 선언하고 분열

¹⁶⁾ 이정남. 2018. "시진핑(习近平)의 중국몽(中国梦)". 아세아연구, 61(4), 165-192.



된 미국의 통합도 역설했는데 세계 최강국 미국의 새 대통령이 통상과 외교, 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공언함으로써 향후 미국만 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 미·중 관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군사·경제·정치 모든 부분에서 패권에 대한 경쟁국의 추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첫 목표는 중국이 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의 ‘중국몽’이 경제패권을 두고 대립구도에 바뀌게 되는데 미국을 상대로 매년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는 중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강력 대응할 뜻을 밝히고, 미 무역대표부(USTR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며 “그 어떤 나라도 미국 기업의 가치 있는 기술을 시장 접근이란 미명 아래 불법적으로 이전하게 강요하는 관행에 맞설 것이다.” 라고 언급한다. USTR의 조사는 1년 정도 진행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입 관세가 인상되는 등 중국에 타격을 가하는 제재로 이어지게 된다. 명분은 무역적자 축소이지만,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무역 문제는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북·미 간 긴장 고조에 이어 대중 무역 전쟁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은 더욱 크게 흔들리게 된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 7월 8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경제 문제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 상대적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 19’로 위기를 맞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근 7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의 첫 임기 동안 정부 구매에 4천억 달러, 기술 분야 R&D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언급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공격적인 정부 투자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국제 무역협상에 앞서 미국 내 투자가 우선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같은 나라의 지적재산권 위협을 막는 것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라고 발언하며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의 입장도 밝혔다. 이는 현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차기 대통령 후보자도 공약으로 내걸 만큼 현재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견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 한 부분이다.

2)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푸른점 네트워크 계획’

지정학은 이데올로기와 시간을 초월하며, 지리적 위치에 따른 국가 간의 힘과 세력구도를 논한다. 중국은 지정학을 중심으로 중국의 힘을 세력화 하는 것, 즉 네트워크화 하는 것을 중국 패권의 본질로 이해하였으며, 시진핑은 이를 바탕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¹⁷⁾ 사업을 추진하게 된

17)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사업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전략으로 ‘新 실크로드’ 구축



다. 현재 개혁과 개방으로 성장한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대외진출에 거점이 되는 지정학적 지점에 위치한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 수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쉽게 투사되는 지역으로 중국의 남하하는 세력의 핵심 거점지에 위치하여 있다. 현실적으로 동남아시아 각국은 중국의 확대되는 헤게모니를 수용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상항에 따라 활용하여 이웃국가와 경쟁하거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일대일로에 대해 대중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동남아 각국은 일대일로 계획수정, 협상번복, 사업지연과 변경, 사업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정학과 팽창 측면에서 동남아 지역은 여전히 중국 네트워크 파워의 영향력이 미칠 파급효과가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강력하다.¹⁸⁾

고대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상업 무역노선이 있었으며, 그 최초의 역할은 고대 중국에서 생산한 실크와 도자기등을 운송하는 것이었다. 이후에는 동방과 서방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주요한 길이 되었으며, 1877년 독일 학자 리히트호핀은 기원전 114년부터 127년까지 중국과 중앙아시아, 중국과 인도 사이에 실크무역을 매개로 한 서역 교통로를 실크로드라고 명명하였다. 오랫동안 개방포용, 평화 협력 그리고 상호 이익이라는 실크로드 정신이 대대적으로 전해져 인류 문명의 융합과 발전 및 연선 국가 간의 경제 및 무역 교류도 촉진하였다. 실크로드는 이렇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간 교류 합작의 상징이자 세계 문명 역사의 보물이기도 하다. 실크로드는 교류방식 및 방향에 따라 육상 실크로드, 실크로드 경제 벨트 및 해상 실크로드로 불리기도 한다.¹⁹⁾

이러한 고대 중국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일대일로의 경로는 국내외 연구소, 언론사, 정부 등 많은 기관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중국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구조에서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경로는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3월 보아오포럼(博鰲, Boao Forum for Asia, BFA)²⁰⁾에서 시진핑 주석은 기초연설을 통해 ‘일대일로는 중국의 독주(獨奏)가 아닌 주변국과의 합창(合唱)으로,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 이라고 언급했으며, 아시아 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을 제시했다. 기초연설이 진행된 3월 28일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상무부, 외교부의 3개 부처는 일대일로의 구체적 계획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사업으로 불리며, 여기서 ‘일대(一帶, One Belt)’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루트’를 의미하고, ‘일로(一路, One Road)’는 ASEAN 국가와의 해상협력 및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루트’를 의미한다.

- 18) 정혜영. 2020. “중국의 지정학과 동남아 네트워크 협력구상: 대륙부·해양부 동남아국가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4(1), 101-136.
- 19) 유립신. 2020.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창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7p
- 20) 보아오포럼: 매년 중국 하이난(海南省) 충하이시(瓊海市) 보아오(博鰲)에서 개최되는 비정부, 비영리 지역경제 포럼이며,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고 있음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²¹⁾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중국의 추진방향은 5대 주요 분야인 대규모 인프라 개발, 연결 시설 건설무역과 투자, 국경 간 투자와 공급사슬 협력 촉진, 금융정책 조정 및 양자 간 금융협력 강화, 인적 유대와 협력 장려를 실현하기 위해서 3대륙 65개국과 중국의 연결성 향상이다.

〈그림 4-2〉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



출처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18

현재 추진 중인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을 〈그림 4-2〉를 통해 살펴보겠다. 일대(一帶)인 육상 실크로드는 적색 점선으로 산시성의 '시안'으로 시작하여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관통해 유럽을 잇는 육상 통로가 된다. 일로(一路) 즉 해상 실크로드는 취안저우에서 시작하여 광저우, 하이난성의 하이커우,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몰디브, 케냐, 그리스,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을 잇는 해상 통로가 되는데 프로젝트의 완성 로드맵은 최종 육상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이다. 이렇게 도로, 철도, 해로를 망라한 교통 인프라의 구축을 시작으로 고속철, 원자력발전소 등 중국 첨단 산업분야도 추진 중이다. 결국, 일대일로를 통해 자국의 경제 영토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참여 국가만 약 70개국이고 투자액은 약 1조 달러로 추정되는데 중국은 이러한 자본의 수요를 AIB(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를 통하여 해소하려고 한다. 중국은 AIB에 약 500억 달러를 출자하여 지분을 30.34%를 확보하여 AIB 최대 주주국가가 되었고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²¹⁾ 송민근. 2017.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국제 통상환경 및 물류거점 간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9p



안건에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었다. 이러한 여건 조성으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 중국은 이 막대한 자본을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위안화를 아시아 내에서의 공용화폐화 함으로써 무역에서의 우위를 점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주요 핵심 사업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한다. 2019년 11월 5일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전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중국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해 ‘푸른 점²²⁾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미국이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자와 교육을 더 늘리는 계획이다. 또한, 아·태 지역과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미국이 중국에 맞서 군사 및 지정학적 지위와 경제 주도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 진다. 이 계획은 미국이 푸른 점 네트워크 추진으로 중국과 동일한 경쟁구도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칼럼을 통해 “일대일로 구상은 어떤 국가의 프로젝트와도 경쟁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미국의 푸른 점 네트워크가 중국을 겨냥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프로젝트를 성공 시키려면 세계의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며 ‘제로섬 게임(zero-sum game)²³⁾ 사고방식을 버리고 상생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상당수가 빚더미에 올라 있는 등 위기에 봉착했다고 미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018년 8월 7일 보도하는 등 미국의 견제와는 별도로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그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 세계 20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위험도 분류(Country Risk Classification)’에 따르면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78개국의 평균 국가위험도는 7점 만점에 5.2점으로 나타났다. 신흥국의 평균 국가위험도가 3.5점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국가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전쟁 가능성과 자연재해도 포함되지만, 주로 경제 상황이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78곳의 평균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또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는 수준인 ‘Ba2’로 점수를 부여했다.

최근 일대일로 참여국의 부실 위험이 드러나고 있는 이유는 무리하게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글로벌 개발센터(CGD)²⁴⁾는 일대일로 참여국

22) 푸른 점: ‘푸른 점’이라는 명칭은 유명한 우주사진인 ‘창백한 푸른 점(The Pale Blue Dot)’에게 따왔다. ‘보이지 1호’가 1990년 2월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 6억km 밖에서 하나의 점 같은 지구 모습이 담긴 이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 사진을 보고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동명의 제목으로 책을 저술했다.

23) 워싱턴 D.C.와 런던에 본사를 두고 국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비영리 싱크탱크이다.

24) 푸른 점: ‘푸른 점’이라는 명칭은 유명한 우주사진인 ‘창백한 푸른 점(The Pale Blue Dot)’에게 따왔다. ‘보이지



중 23곳이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에서 자금을 과도하게 빌린 탓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미국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몬테네그로 등이 부채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문제에 부딪혔다”며 “그들이 중국에 진 많은 빚을 갚지 못할 것으로 보이거나, 일대일로 인프라 사업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OECD 국가위험도 분류에서 7위에 오른 파키스탄은 이미 10여 차례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았을 정도로 부채 규모가 심각하다. 알렉스 흄스 캐피탈 이코노미 연구소의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파키스탄은 대규모 중국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대한 자본재를 수입해 지불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스리랑카는 2010년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아 남부 지역에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했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적자만 쌓여 지난 12월 운영권을 중국에 넘긴 바 있다. 중국과 무역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은 여러 나라에게 빚을 떠넘기는 이 일대일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미 상원의원 16명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일대일로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지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국가들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서한을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 보도했다. 189개국에 참여하는 IMF에서는 최대 출자국인 미국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서한의 파급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란다 엘라가르 IMF 대변인은 서한을 받은 후 “IMF는 국가에 대한 대출을 결정하기 전 항상 부채 지속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한다”고 밝혔다.²⁵⁾

일대일로는 지역 개발, 경제와 금융, 경제 등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국제 개발 종합세트이다. 이러한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의 주도하에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분배 보다는 성장을 중요시 하는 파이를 키우자는 경제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공공재를 둘러싼 각국의 이익은 시간이 지나면서 충돌할 수밖에 없고, 공동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지닌 협력체계 이지만 이 체계 속에도 각국의 국가 이익 확보에 대한 경쟁은 여전히 내재한다.

3. 미·중 전략경쟁의 함의

중국과 미국은 이렇듯 과거 협력과 경쟁의 관계로 시작하여 전략경쟁의 구도로 발전하고 유지해 왔으며,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은 패권국가로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력전이’를 용납하지 않고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를 해 왔었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게서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전통적 관점에서 양국의 관계는 서로 전

1호가 1990년 2월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 61억km 밖에서 하나의 점 같은 지구 모습이 담긴 이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 사진을 보고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동명의 제목으로 책을 저술했다.

25) 조민아. 2018. “中 일대일로 ‘빛잔치’…美 “참여국에 IMF 지원 차단.” 『국민일보』(8월 8일), 5.



략적인 경쟁만을 유지하고 심각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발언과 공약대로 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견제 형태는 ‘제로섬 게임’ 범주 안에 있으며, 이런 유형의 게임에서는 경쟁자 사이의 협조는 기대할 수 없다.

뉴욕대학 교수 데이비드 던(David Denoon)은 전쟁 발발의 조건과 가능성을 다른 시각에서 설명했다. 그는 미·중 관계의 현재 저조는 2007년 시작됐다고 본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와 중동에 전념하면서 중국의 2007~2008년에 더 많은 자신감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그것이 워싱턴의 강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이웃 국가들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정책의 활개를 치며 “아시아로의 전환”과 “재균형”을 선언한 것은 부시 대통령보다 아시아에 대한 군사와 경제적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균형 이면의 발상은 탄복할 만하지만 후속 움직임은 미흡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우유부단함에 따라 악순환이 시작됐다. 아랍의 봄에 대한 약한 반응, 리비아에 대한 동요, 시리아 정부의 자국민 화학무기 사용 실패도 워싱턴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이 틈을 이용해 남중국해에서 더욱 강경한 정책을 폈다. 2009년에 이르러 미국 발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자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의 경제 관리 방식이 미국의 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약한 외교정책과 경제 불안의 결합은 중국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이상적인 국면을 제공했다.²⁶⁾

특히, 금융위기 당시 엄청난 양적완화를 통해 그 위기가 가라앉게 되는데 이때 중국의 총리 원자바오가 미국은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등 미국에 대해서 전략경쟁을 넘어선 패권경쟁 초입단계와 같은 중대한 도발들을 하게 된다. 2008년 당시 중국은 중국경제의 과열 및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대응과 EU, 미국, 일본 등과의 경제회담을 대비한 전략적 의도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기습적으로 감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경제위기 직후에 위안화 국제화 추진으로 패권경쟁 이슈로 미국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잠시 보였었다. 당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중국 수출 경쟁력이 오히려 더 높아졌었고, 미국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위안화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과거 중국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직접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쟁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경쟁을 시작했었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중 긴장관계는 더욱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미국의 석학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은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 2017)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²⁷⁾이라는 용어를 도입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질 ‘예정된 전

²⁶⁾ Yoshihide Soeya, 2010. “Japan’s Security Policy toward Northeast Asia and Korea : From Yukio Hatoyama to Naoto Kan.” 전략연구, 17(2), 43-67.

²⁷⁾ 투키디데스의 함정: 아테네 출신 철학자 투키디데스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쓰면서 “기존 맹주였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성장한 아테네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두 나라는 지중해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정치학 용어로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쟁'을 서술했다. 엘리슨은 "투키디데스가 예언했듯이 급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기존의 세력 판도를 흔들면 결국 양측의 무력충돌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미·중 간 전쟁을 예고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이러한 요인들로 지속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더욱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데, 이후 전략경쟁에서 패권경쟁의 초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2020년 1월에 워싱턴 주에 사는 35세 미국 남성 1명이 중국 우한을 방문 후 1월 20일 최초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²⁸⁾ 급속도로 미국 내 감염사례가 늘어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팬데믹'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 내 '코로나 19' 최초 확진자 발생 후 2~3개월이 지나면서 미국의 방역체제 취약성이 확인되고, 보건 질서의 리더십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 기존 전략경쟁을 유지하던 구도에서 '신형대국관계'의 수립을 요구하며 양국 간 패권경쟁 초입 단계로 들어서는 구도로 바뀌게 된다.

Ⅲ. '코로나 19' 사태 중 미·중 경쟁

1. '코로나 19' 관련 미·중 역내 갈등

가. 미·중 보건협력 갈등

'코로나 19' 사태 발생 후 미국은 왜 그렇게 중국에게 화가 나 있을까? 2020년 3월 초 미국에서는 '코로나 19'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워싱턴주, 뉴욕주, 캘리포니아 등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다. 이 당시 CNN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주 등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 사이에 400명 이상이 늘어난 추세였고, 아울러 뉴욕증시는 9일 개장 이후 폭락세를 보이면서 주식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 이에 따라 15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 19' 책임론과 무역 갈등을 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게 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이제 막 엄청난 무역 협정을 했으며 잉크는 거의 마르지 않았고 세계는 중국에서 온 전염병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 100개의 무역 협정이 그 차액을 메울 수 없을 것이며 모든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5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비즈니스뉴스와 인터뷰 중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모든 관계를 끊는다면 미국은 5천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코로나 19' 사태 이후 중국 관련 발언 중 가장 강도가 높게 평가되며 이는

Trap)이라고 한다.

²⁸⁾ BBC뉴스, 2020. 1. 22. "우한 폐렴: 미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이 나왔다?"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2052684>



중국에 대한 전면 공격을 의미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중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미국이 매년 수천억 달러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던 불편했던 부분을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기회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환자관리와 감별진단,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 바이러스의 재확산 방지 등의 문제 해결에는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미·중 관계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동안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 하며 갈등관계로 대립을 이어가던 양국은 ‘코로나 19’ 사태가 도화선이 되어 결국은 패권경쟁으로 갈등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략경쟁 구조의 문제점들이 아니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한 갈등구조이며, 패권양상이 없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요소들이 미·중 관계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이 패권경쟁은 아·태 지역의 국가들의 외교안보 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중 보건협력 관련 갈등이다. 현 시점에서 보건협력은 국제관계에서 군사적인 침투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1) 미·중 방역모델 분석

감염병이 발생하면 국가 주도하 봉쇄와 통제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뒀다. 하지만, 이렇게 봉쇄와 통제를 통해서 감염병 확산을 지연하거나 차단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국가의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국민들의 생계는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감염병 발생시 봉쇄 및 통제 그리고 개방이라는 두 정책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팬데믹을 과소평가하였고 주정부가 개인이 알아서 스스로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중국과 달리 정파적 이익에 따라 코로나가 이용되고 최후에 봉쇄명령(lockdown order)이 내려지고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정부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봉쇄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결국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2020년 3월 19일 “실내격리”를 선언하고 41개 주가 실내격리 명령을 내린다.²⁹⁾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봉쇄를 풀려는 경향이 강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게 되어 각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미국에서는 봉쇄조치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간 이기주의적 갈등은 없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 초기 유행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았고 봉쇄를 풀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주들은 22개에 불과했다.³⁰⁾ (Kim et al. 2020).

²⁹⁾ Ren, Xuefei. 2020. Pandemic and lockdown: a territorial approach to COVID-19 in China, Italy and the United States.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³⁰⁾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공공장소에서 착용을 의무화하는 주들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주들도 있다. 미국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델라웨어, 일리노이, 캔자스, 켄터키,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등 거의 22개 주이다(Kim et al. 2020).

참고문헌 : Kim, Allen, Scottie Andrew, and James Froio. These are the states requiring people to wear masks when out in public. 출처: <https://edition.cnn.com/2020/06/19/us/states-face->



미국은 ‘코로나 19’ 국면 당시 한국형 방역모델인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도하여 추진하였던 초기 검사·확진, 조사·추적, 격리·치료 등과 같은 체계적인 방역단계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전문화된 방역모델도 없었다. 하지만, 미국에도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정부 주도형 기관인 국제 건강 안보팀(Global Health Security Team)이 존재했었다. 이 조직은 ‘예방, 조기 감시, 대응’으로 구분하여 실천 패키지와 5년 후 목표, 측정지표까지 갖춘 전문화된 조직으로서 2014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Ebola virus)가 바다 건너 미국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한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국가 안보 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산하 ‘국제 건강 안보팀’을 만들어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증의 유행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를 백악관 내에 마련한 것이었다. 미국에는 연방정부 기관인 질병 통제 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등 여러 연방기관들 뿐만 아니라 주정부 산하의 보건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감염증의 유행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데에 관여한다. 이처럼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을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바로 이 조직이 그런 역할을 수행했었다. 그런데, 2018년,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었던 존 볼턴 (John Bolton)의 건의를 받아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팀을 해체해 버렸다. 여러 기관들의 역할을 조율하고 조절해야 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염증 유행을 조절하고 통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구인 테스트 키트(test kit)의 개발과 생산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독일에서 만든 테스트 키트를 사용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제조, 생산하는 것을 고집했다. 그동안 새로운 감염증이 나타나면 해 왔던 것처럼, 처음에는 CDC가 테스트 키트 만드는 것을 주도 했다. 그런데 2월 중순 CDC가 개발해서 각 주에 배포한 테스트 키트가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확한 사유는 네거티브 콘트롤 (negative control) 중 하나가 생산과정에서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테스트 키트의 사용이 지연되자 2월말 연방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 시작한다. 또한, FDA와 테스트 키트 제조회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독려했다.³¹⁾ 하지만 이미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대한 골든타임은 놓쳐 버렸고 테스트 키트의 개발이 지연되는 사이, ‘코로나 19’는 미국 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의사이자 사회학자인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예일대 교수는 “중국이 올 1월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격리하기 시작했을 때 ‘코로나 19’에 대비했어야 했다”며 “우리는 6주를 잃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진단과 치료비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과 국가 역할에서 큰 차이가

mask-coronavirus-trnd/index.html (검색일: 2020. 07. 08.).

31) 신재규. 2020. “미국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이 실패한 이유.”

<https://www.yakup.com/pharmplus/index.html?mode=view&cat=25&cat2=463&nid=3000132327>
(검색일: 2020. 09. 15))



있다. 미국은 최초 진단비용과 치료비용을 국가가 국민들에게 모두 지원을 하지 않았다. CDC가 전담하는 ‘코로나 19’ 검사 비용은 ‘무료’이지만 CDC검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 병원 입원비 등은 환자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선 민간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의료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체 미국인의 8.5%에 달하는 2,750만명 정도가 의료보험 미가입자이며, 이들은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에 가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³²⁾ 결국 미국은 초기 대응 실패, 봉쇄 정책의 지연, 체계화된 코로나 방역모델의 부재, 진단과 치료비 비용의 미지급 등의 결과로서 연방정부가 방역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2020년 3월 13일 트럼프 ‘코로나 19’가 국가적 위기상황(National Emergency)이라고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코로나 19’ 국면시 성공적으로 통제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코로나 19’ 국면시 적용했던 방역 모델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은 실패이고, 최종 통제는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초기 대응은 ‘사스’ 때와 유사하게 최초 ‘코로나 19’ 의심환자에 대한 정보를 축소, 은폐하고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결국 ‘코로나 19’ 세계 확산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31일 우한시 정부 위생건강위원회가 ‘원인 상세 불명 폐렴(PUE)’(WHO는 후에 이를 ‘코로나 19로’ 명명)의 발병 사실을 국무원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보고한 때부터, 2020년 1월 2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이를 ‘을류(乙類: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되 대응은 최고 수준인 ‘갑류(甲類: 1급)’로 한다는 방침을 결정할 때까지 20일 동안, 중국은 정보를 축소하고 언론을 통제하면서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치했다. 그러나 1월 20일의 발표에 따라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에 대한 봉쇄 정책을 실시한 이후, ‘코로나 19’의 확산은 3월 19일에 최초로 ‘국내 발생 확진자 없음(無)’(해외 유입 확진자는 계속)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통제되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로 방역에 성공한 ‘모범국,’ 세계 각국에 방역에 대처할 시간을 벌여준 ‘희생국,’ 세계에 방역의 성공 경험뿐만 아니라 의료 물자와 인원도 제공한 ‘기여국’을 자임하고 있다.³³⁾

이렇게 중국은 초기대응은 실패 했지만, 차후 봉쇄정책은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코로나 19’ 국면시 ‘인민 전쟁’을 선언하고 발병지 우한(武漢)을 포함한 후베이(湖北)성을 전면 봉쇄하는 등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람의 이동을 전면 차단해 단시간에 ‘코로나 19’ 확산을 안정화 시킨 것은 사실이다. 중국이 국력을 총동원한지 한달만에 통제가 이루어진 것은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러한 봉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는 차원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확진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³²⁾ 손정인. 2020. “한국은 코로나19 치료비용 국가가 전액 부담, 다른 나라는?.”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4&idx_800=2387476&seq_800=10380549
(검색일: 2020. 09. 15).

³³⁾ 조영남. 2020. “중국은 왜 코로나 19의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 『한국과 국제정치』 36(2), 107.



징역,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확진자는 10년 이상 종신형, 사형까지 가능하게 조치했기 때문이다.³⁴⁾ 실제, 2020년 3월 초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 19’ 통제에 성공한 국가로 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탐지와 진단, 치료, 격리, 추적 등을 한다면 집단이나 지역 감염을 통제 가능하다고 발표한다. 중국은 일단 공산국가로서 우한지역을 아예 봉쇄한 것처럼 강력한 국가 권력이 작동하게 되어 다른 국가들보다는 ‘코로나 19’ 확산에 대해 ‘방역 모범’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

봉쇄정책 이후, 중국 정부는 우한에만 38,000명의 의료진을 파견하는데 1월 25일부터 후베이성 파견을 시작으로 3월 4일에는 344개 국가의료팀을 후베이성에 파견하였다. 인원으로 보면 42,322명으로 의사 11,416명, 간호사 28,679명이었다. 이중 38,478명이 우한에만 파견되었다.³⁵⁾ 또한, 예견되지 않았던 ‘코로나 19’ 확산에 대해 일주일 만에 병원을 건축하는 등 모자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속도전을 추진하게 되는데 중국의 경우 샤오탕산(小汤山)병원 모델³⁶⁾을 적용하여 1월 25일 건축을 시작하여 2월 2일 우한 화셴산(火神山)병원이 만들어졌다. 우한은 장샤구(江夏区) 황자후(黄家湖)에 샤오탕산 모델에 따라 레이선산(雷神山)병원도 만들어졌다. 우한 외에도 어저우(鄂州), 시안(西安), 썬전(深圳) 등지에서도 응급병원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어저우시는 레이산(雷神)병원을 만들었다. 시안의 샤오탕산 병원은 2월 3일 공사를 시작하여 8일 만인 2월 10일 완공되었다.³⁷⁾

이렇게 중국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중국은 지속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안정화에 접어들게 되는데, 여기에는 진단비용 및 치료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 19’ 사태 초기에는 중국 보건당국의 바이러스 검사 지원체계가 미흡해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컸지만, 이후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의심환자와 확진자 모두 기본 의료보험, 중병보험, 의료기금에서 충당되지 않는 개인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서 지급해 주었던 것이다. 결국, 중국은 24일째 국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자 2020년 9월 8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코로나 19’ 방역 표창대회를 열고 사실상 ‘코로나 19’ 종식을 선언했다.

2) 미·중 리더십 경쟁

현재 ‘코로나 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의 국가 지도자들은 전례 없는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34) 律师. 2020. “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可能涉嫌的33个罪名及处罚.”

<https://baijiahao.baidu.com/s?id=1658230694700521431&wfr=spider&for=pc>
(검색일: 2020. 09. 15).

35) Xiao Yiju. 2020. “Over 38,000 medical workers sent to Wuhan to fight virus.”

http://en.nhc.gov.cn/2020-03/24/c_80407.htm(검색일: 2020. 09. 15).

36) 샤오탕산 병원 모델: 2003년 사스 발병 시기 베이징에 7일내에 병원을 짓고 2개월간 중국 전국 환자의 1/7을 수용하여 감염 확산을 막은 경험을 토대로 만든 병원 모델이다.

37) 吴娇颖. 2020. “多地开建新冠肺炎专门医院 小汤山模式如何落地全国. 新京报.”

<https://baijiahao.baidu.com/s?id=1657690019422024983&wfr=spider&for=pc>
(검색일: 2020. 09. 06.).



평가를 받고 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코로나를 통제했는지, 얼마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어떻게 방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잘 대응했는지 등에 대한 평가내용들을 분석하여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 평가가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I don't take responsibility at all (저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2020년 3월 13일, 한 기자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 테스트가 미국에서 아직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트럼프의 답변이다. 그리고 본인은 잘못이 없으며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³⁸⁾

이러한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답이 왜 미국 정부가 ‘코로나 19’ 대응에 실패했는지 설명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코로나 19’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발언들을 공식 석상에서 자주 언급한다. 실제 뉴욕타임스는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19’가 중국에서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1월 18일 휴가 중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코로나 19’의 위험성을 알렸지만 정작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모든 공식석상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참석을 하게 된다. 이후, 포드 공장을 방문 할 때는 기자들 앞에서만 잠시 착용을 한 모습이 처음으로 확인되나 포드가 있는 미시간 주의 법무장관은 트럼프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켰다며 “그가 미국의 대통령 이라는 것이 수치스럽다” 라고 언급한다.

또한, 미국에서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던 2020년 4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살균제를 사람 몸에 주입해 보자는 믿기 힘든 발언까지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미국의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살균제 주입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에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대 교수 ‘폴 헌터’는 “아이들이 들을 수 있으니 진심을 제대로 말 못하겠습니다. 이제껏 나온 가장 위험하고 멍청한 제안입니다.” 라고 방송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제조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균제는 인체에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고, 정부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까지 나서서 비슷한 경고문을 공개했다. 트럼프가 ‘코로나 19’ 치료제로 홍보했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국 FDA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까지 하게 된다.³⁹⁾

이렇게 한 국가의 ‘코로나 19’ 관련 위기관리 조치능력에 대한 한계와 리더십의 부재가 트럼프의 발언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트럼프의 돌발적인 행동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확진자를 접촉한

³⁸⁾ POLITICO. 2020. “I don't take responsibility at all: Trump deflects blame for coronavirus testing fumble.” <https://www.politico.com/news/2020/03/13/trump-coronavirus-testing-128971> (검색일: 2020. 09. 06.).

³⁹⁾ POLITICO. 2020. “살균제 주입 치료"라니...트럼프 발언에 '경악'.”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45100_32524.html(검색일: 2020. 09. 06.).



측근의원과 악수를 하고 전용기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트럼프의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확진 판정된 브라질 대통령 공보국장과 접촉하며 두 번째 감염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감염 가능성 때문에 백악관이 발각 뒤집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확신하건대... 자 이렇게 봅시다. 나는 우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언급한다. 대통령까지 ‘코로나 19’ 검사를 꺼리는 가운데 미국은 왜 한국처럼 검사를 못하냐는 질책은 미 의회에서 일상이다시피 발생한다.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19’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 보건 당국은 “코로나 19 검사가 다른 나라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라고 언급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도 한다.⁴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0월 2일 새벽 1시에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최측근인 호프 히스 백악관 고문의 ‘코로나 19’ 양성 판정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신과 아내 멜라니아도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으며 양성 판정을 받았음을 밝힌다. 히스는 2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대선 첫 텔레비전 토론회를 비롯해 최근에도 트럼프와 여러차례 출장을 다녔다. 히스는 29일 클리블랜드로 향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등 대통령 최측근들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탔다. 이튿날 미네소타 유세를 다녀올 때도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원에 동승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 이외에 대통령의 최측근들 역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백악관 동료의 말을 인용해 히스 고문이 회의에서 마스크를 산발적으로 착용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에서 히스 고문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⁴¹⁾

이상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19’ 사태를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의 부적절한 방역체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역체계가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1948년 WHO 수립 이후 WHO 중심의 국제보건협력 사업의 방향에 대한 설정과 시행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미국에서 이렇게 취약성이 발견됐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다. 결국, 미국은 위기관리 조치에 대한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와 이에 따른 연방정부의 비효율적인 방역 자원 배분으로 ‘코로나 19’ 대응에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을 해결하려면 지도자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 비협조적인 언행과 소극적인 대처로 미국을 ‘코로나 19’ 방역 최악의 국가로 만들었다. 국제적으로 트럼프가 부적절한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단순히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비판이 아닌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부재까지 이어지며, 이러한 글로벌 리더십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40) 김웅규. 2020. “트럼프, 또 감염 위험 노출...미국 ‘정책 실패’ 인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01465>(검색일: 2020. 09. 06.).
41) 한겨레뉴스. 2020. 10. 2. “트럼프 부부 코로나 확진... 회복기간 백악관 격리.”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64225.html



한편, 중국의 시진핑은 ‘코로나 19’ 의심환자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고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코로나 19’ 세계 확산을 가속화 하여 중국과 전 세계가 혹독한 대가를 가져왔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왜 2002년 ‘사스 사태’와 동일한 방식으로 초기대응에 실패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봉쇄정책과 여러 경로의 효율적인 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최소화 하고 국제적으로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다. 2020년 1월 28일에 시진핑 총서기를 만난 WHO 테드로스(Tedros) 사무총장은 중국의 방역을 높이 평가하게 되는데 중국의 신속함과 대규모 모는 세계에 없던 일이고, 이는 중국 제도의 우세로서 타국이 참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⁴²⁾ 일부 학자들도 중국의 업적을 평가했다. 초기 대응에서 정보 통제와 관료주의의 문제점을 보여주었지만, 질병 통제 과정에서는 자원을 총동원하고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이 갖고 있는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위계적 정치체제의 장점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다.⁴³⁾

중국의 시진핑은 ‘코로나 19’ 국면시 모든 국력을 총동원 하여 철저히 대응을 하는데, 2020년 1월 28일 ‘코로나 19’가 전 세계 확산이 시작되고 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WHO 사무총장과 만나 ‘코로나 19’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에서 WHO 사무총장 및 관계자들에게 “우한 폐렴은 악마이고, 우리는 악마가 활개 치고 다니게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내가 직접 지휘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협력하며 과학적으로 대응한다면 반드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중국은 WHO가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WHO와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공공 위생과 생명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⁴⁴⁾

시진핑은 중국이 안정화 되면서 곧바로 ‘코로나 19’ 관련 피해 국가에 마스크 등 의료방호물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는데 실제 ‘코로나 19’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은 세계 각국에 ‘코로나 19’ 방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0년 4월 8일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에서 발표한 시간대별 ‘코로나 19’ 공동 방제를 위한 대외 지원 상황을 보면 2월 29일 중국 적십자회(홍십자회) 지원의료 전문가팀이 이란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 적십자회에서 파견한 중국 측 의료전문가팀과 방역지원물자가 이라크에 도착하게 되고 이 시기에 중국은 세계 보건기구(WHO)에 2,000만 달러(약 244억원)를 지원한다고 선언한다. 이후, 약 한 달간 세르비아, 이탈리아, 파키스탄, 라오스,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에 차례대로 지원을 하고 120개국과 4개

42) 习近平. 2020. “在中央政治局常委会会议研究应对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工作时的讲话.” 〈求是网〉
<https://www.qstheory.cn>(검색일: 2020.2.17).

43) Daniel A. Bell and Wang Pei. 2020. “China’s coronavirus response and Italy’s struggles show the benefits of a hierarchical system and where it needs improvement.” South China Morning Post. <https://www.scmp.com>(검색일: 2020. 09. 16).

44) “시진핑 ‘신종 코로나는 악마... 직접 지휘해 승리할 것.’ 『YTN 뉴스』, 2020년1월 29일.
https://www.ytn.co.kr/_ln/0104_202001290038451368 (검색일: 2020. 09. 16)



국제기구에 일반 의료용 마스크와 N95 마스크, 방호복, 핵산 진단키트 등을 포함한 물자를 지원하게 된다. 중국 지방정부는 50여개 나라에 의료물자를 지원했으며 중국 기업은 10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에 의료물자를 제공했다.⁴⁵⁾

‘코로나 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 되고 국가별로 그 피해가 누적된다면 ‘중국 책임론’이 다시 대두될 것이다. 이를 대비해서 ‘코로나 19’ 사태의 조기 종식과 세계경제의 회복,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중국 정부가 직면한 국내외적 도전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좋은 기회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숨은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선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적극적인 국제적 보건협력 체제 구축과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국의 방역 경험과 막대한 의료물품을 세계 각국에 지원하며 ‘코로나 19’ 방역을 주도하는 ‘책임감 있는 패권국’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3) 미·중 보건협력 경쟁

‘코로나 19’ 사태 이후 미·중간의 경쟁은 보건협력 분야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글로벌 리더십’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라는 문제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중 관계는 대립적인 구도로 전략경쟁에서 패권경쟁 초입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방역체제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고, 중국은 이러한 보건질서 환경에서 미국을 대치하려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전문가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전 차관보 ‘커트 캠벨’과 ‘러시 도시’는 2020년 7월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지난 70년간 미국이 지탱해온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은 부와 권력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바른 국내 통치를 통해 얻게 되는 정권의 정당성과 국제 사회에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필요한 리더로서의 조정력 등에서도 나온다.” 그러면서 미국 지도부의 이 세 가지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검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이 검증에서 낙방했다. 중국은 미국이 주춤한 틈에 생긴 리더십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속하고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다.⁴⁶⁾

‘코로나 19’ 사태 이후 전 세계로의 영향력 확장에서 중국은 보건협력을 더 강화하면서 협력의 대가를 바라는 ‘영향권 전략’을 사용하여 패권국가로서 발돋움을 시도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 19’ 사태 이전부터 중국은 지속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배타적인 영향권을 설정한다는 전략이었고, 최초에는 인프라 건설이 목표였

45) “중국, 세계 각국에 코로나19 대응 지원.” 『아주경제』, 2020년 4월 9일.

<https://www.ajunews.com/view/20200409174938086> (검색일: 2020. 09. 16)

46) BBC뉴스, 2020. 7. 1. “코로나19: 미국은 지는 해가 되고 중국은 뜨는 해 될까?”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2052684>



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국은 경제 분야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가며,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의 99년 조차권을 양도받는 등 타국의 주권 확보와 군사시설까지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극복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사업을 향후 지속 추진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공중보건 분야 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커진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중국내 신규 감염자 제로를 선언한 뒤 유럽을 향해 대규모 코로나바이러스 원조를 통한 ‘건강 실크로드’ 구축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시점이 미국이 지난 EU 전체 회원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EU 회원국도 서로 국경을 봉쇄하며 의료용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 상황에서 추진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난이 지속되자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와 몇몇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에 2020년 만기인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출 변제기한을 연기하거나 탕감하는 등의 채무 재조정을 요구했는데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막대한 자금을 대출하여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현 시점에서 채무 상환기한의 조정 등 이러한 국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중국의 ‘영향권 전략’은 더욱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미·중 경쟁은 양국 모두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지키려는 자, 빼앗으려는 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 하고 상대국을 배척하고 공격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군사적인 침투보다 더 활발하고 효과가 있는 보건협력을 통한 ‘영향권 전략’에 대해서 양국이 더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이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를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집중하고 투입하고 있다. 백신 개발을 먼저 성공하는 나라가 ‘영향권 전략’의 최고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중국이 먼저 개발한다면 ‘초기 대응 실패’와 ‘중국 책임론’을 한방에 종식시키면서 보다 더 전략화 된 ‘영향권 전략’을 추진하며 ‘일대일로’ 사업까지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미국이 먼저 개발하고 독점한다면, 그동안의 부적절한 글로벌 리더십과 미국의 취약한 방역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망신과 실망감을 단 한 번의 선점으로 무마시키며 다시 패권국가로서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백신 국수주의’, ‘백신 냉전’이라는 평가까지 등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거듭 “코로나 19 백신은 세계적 공공재”라며 초국가적 협력을 촉구했지만, 개별 국가들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20년 5월 15일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이라는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민간 제약사·군이 합동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개별 제약사가 각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대신 정부의 주도하에 제약사들이 합동으로 개발에 매진한다는 것이다. 백신 개발 기간의 최대 단축이 목표로, 내년 1월까지 3억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백신 생산을 기치로 내걸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속도



전'을 이끌고 있다. 국유 기업과 연구소는 물론 인민해방군까지 동원돼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중국은 국제 공조보다 세계 첫 번째 백신 개발국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미·중 경쟁과 관련된 민족주의 부상과 다자주의의 쇠퇴가 뒤섞이면 코로나 19와의 싸움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빌 게이츠의 아내이자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이끄는 멀린다 게이츠 역시 “최악의 상황은 백신이 나온다 해도 그것들이 최고 입찰자에게 우선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라며 백신 독점을 경고했다.⁴⁷⁾

중국은 홍콩의 ‘코로나 19’ 재확산을 계기로 홍콩을 더 빠르게 장악하려고 추진중에 있다. 입법회를 연기하고 중국의 방역 모델을 홍콩에 적용하여 ‘코로나 19’ 방역에 나선 것이다. 홍콩이 2020년 7월 대형 무역 전시장에 500병상 규모의 임시 병원을 마련했는데, 최근 들어 ‘코로나 19’ 확진자가 하루 100명 이상씩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홍콩 틴슈이와 이 병원 응급부 박사 ‘리랍입’은 “집에 있던 환자들을 병원 시설의 수준이 갖춰진 장소로 이동하는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고 언급했다. 홍콩의 임시 병원은 중국이 지난 2월 후베이성 우한에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며, 홍콩 의사협회 회장 ‘헨리 팡홍링’은 “임시병원을 짓는 것을 중국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언급한다. 홍콩은 ‘코로나 19’ 하루 검사 능력도 6천 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하는데 최근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가 750만 홍콩인 전부를 검사해야 한다고 말한 뒤 나온 방침이며, 중국은 이를 위해 의료인력 60여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홍콩 정부의 요청을 중국이 수용하는 형식인데 이런 지원이 보안법 강행과 입법회 선거 연기에 대한 반발까지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입법회 선거 연기로, 홍콩은 입법기관이 1년 동안 공백 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의원들의 임기가 다음 달 초면 끝나기 때문이다. 친중파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입법회 의원을 임명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고 ‘코로나 19’ 재확산을 틈타 중국의 개입이 깊어지면서 홍콩 민주 진영은 이 중고를 겪고 있다.⁴⁸⁾

미국은 이러한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보건협력’을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하며,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홍콩의 방역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인과관계가 명시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고 중국도 자국 내 미국 총영사관에 폐쇄를 통보하는 등의 ‘보건 협력’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미·중 관계의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미·중 패권경쟁

가. 미·중 패권경쟁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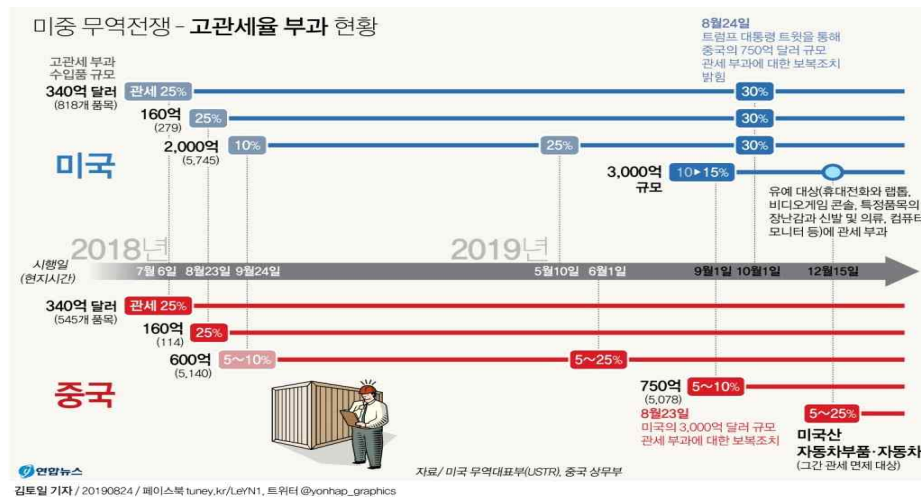
47) 권유진. 2020. “첫 개발국이 패권 잡는다, 미·중·EU ‘백신 전쟁.’” 『중앙일보』(5월 18일)

48) 권유진. 2020. “첫 개발국이 패권 잡는다, 미·중·EU ‘백신 전쟁.’” 『중앙일보』(5월 18일)

1)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

2017년 8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에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내용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2018년 7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 818개 품목에 25%인 340억 달러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중국은 맞대응을 하며 미국의 수입품 545개 품목에 대해 동일한 25%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다. 무역전쟁 초기에는 미국 내 여당인 공화당까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전황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하는 방식을 제외하고는 무역전쟁과 중국에 대한 강경책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 내 반대는 거의 없었다. 'ZTE'와 '화웨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보다도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시행중인 대중국 '보호무역⁴⁹⁾ 정책'이 결국 미·중 간 무역전쟁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보호무역 정책은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상대적 이익'을 방지하고 미국이 경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조치를 통해 미·중 간 무역불균형을 개선하여 경제역량 우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림 4-3〉 미·중 고관세율 부과 현황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GYH20190824000300044?section=search>)

미국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으나, 최근 미국의 대중국 수입 증가는 양적 증가만이 아닌 질적 증가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간 무역불균형 심화가 중국의 기술

⁴⁹⁾ 보호무역 :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이다. 재화, 용역 등 교역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 할당제 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 등이 보호무역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다.



수준 향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 과정에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통상법 301조에 의한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관세 성격으로 미국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3차례에 걸쳐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는데, 미국과 중국의 그 동안의 고관세율 부과 현황은 그림 <4-3>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 결과 2019년 1,2분기의 양국 간 교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중국의 수입도 상당 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대미국 수출에 투입되는 한국산 중간재의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미·중 무역마찰의 국내 파급효과는 중국측 제재에 비해 미국측 제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 영향은 1~3차에 걸쳐 각 4억 4,000만 달러, 2억 달러, 23억 7,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대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는 1~3차 각 1억 5,000만 달러, 5,000만 달러, 1억 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미중 무역마찰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⁵⁰⁾

미국 통계국, BBC 연구(2017년 총수입 기준)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수출 규모는 1천 5백억 달러이며 중국의 미국 수출 규모는 5천억 달러이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 중국이 손해를 볼 것이고 결국 미국에게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미국의 경제 및 금융 전문 TV 채널(CNBC: Consumer News and Business Channel)에서 미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미국의 대중국 수입규모가 530억 달러(약61조원)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45억 달러 감소하는데 그쳤다. CNBC는 이러한 숫자만 보면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로 바꾸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즉, 1~9월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5.5% 하락했는데, 대중국 수입은 13.45% 감소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줄어든 것보다 수출 물량이 더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기 전과 비교하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폭은 훨씬 더 커진다. CNBC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이미 수백억 달러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모두 무역전쟁의 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를 철폐한다면 양국 간 수출이 되살아날 수도 있지만, 만약 중국이 이미 공급선을 다른 국가로 돌렸다면 미국의 수출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⁵¹⁾

50) 김바우, 김정현. 2019. "미중 무역마찰의 경과와 영향."



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12&state=view&idx=55579(검색일: 2020. 09. 17).

51) 뉴시스. 2019. "1~9월 美의 대중국 수출 15.5%↓...수입은 13.3%↓그쳐,"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lIndex=55394&sSiteId=2&searchReqType=detail&searchCondition=TITLE&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



여기서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미·중 양국에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양국 간의 보복관세의 격화가 202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 떨어뜨릴 수 있다고 예측 했으며, 로이터통신과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7월 한국은 기술선진국으로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역시 중국 컴퓨터와 전자 제품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의 다국적 기업에 위협요소가 된다고 언급했다.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한다. 내용은 미국의 관세 조치는 1,600억 달러(약 185조 원) 관세 부과 보류, 1,2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에 부과해온 15% 관세를 7.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며, 중국의 이행조치는 2년간 2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미국의 재화·서비스 추가 구입,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강화 등의 내용이다. 분쟁해결 절차로는 합의위반 판단 시, 실무·고위급 협의를 진행하며해결이 안될 때는 90일 이내 관세를 재부과 하는 것이다.<그림 4-4>

<그림 4-4>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내용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내용		미국  중국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	분석																			
미국의 관세 조치	작년 12.15부터 시행 계획이던 16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부과 보류, 다른 1200억달러 규모에 부과해온 15% 관세를 7.5%로 축소, 2500억 달러 규모 상품 관세 25%는 그대로 유지	미국이 상당 부분의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2단계 무역협상의 지렛대 활용 가능성																			
현재의 이점여부	추가 수입	2년간 2천억 달러 재화·서비스 추가 구입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th> <th>공산품</th> <th>농산물</th> <th>에너지</th> <th>서비스</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2020년</td> <td>329</td> <td>125</td> <td>185</td> <td>128</td> <td>767억 달러</td> </tr> <tr> <td>2021년</td> <td>448</td> <td>195</td> <td>339</td> <td>251</td> <td>1,233억 달러</td> </tr> </tbody> </table>	품목	공산품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합계	2020년	329	125	185	128	767억 달러	2021년	448	195	339	251	1,233억 달러	에너지 부문은 수입을 늘릴 여지가 있으나 농산물은 추가 수입 여지에 대한 회의론이 큰 편 (관세전쟁 재발 가능성)
	품목	공산품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합계															
	2020년	329	125	185	128	767억 달러															
	2021년	448	195	339	251	1,233억 달러															
	농산물 수입	2020년 365억, 2021년 435억 달러 (2017년 240억) 최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가공육, 유제품, 쌀, 해산물, 과일·채소 등																			
기술이전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가장 강도높은 현안으로 중국의 기술 굴기와 관련된 상징적 이슈, 화웨이 제재 문제는 논의하지 않음, 사이버 보안 등 첨예한 이슈는 2단계 무역협상으로 넘어감																			
지식재산권	'역선물권' 수입 등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강화, 침해시 형사처벌 조치, 제약업계 특허 보호조치 강화,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인수) 지시 관행 억제.																				
금융·환율	경쟁력 평가절하에 나서지 않고 외환 정보 공개 등 투명성 개선	1.13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중국 제외한 것도 합의 내용 고려 조치																			
분쟁해결 절차	합의 위반 판단 시, 실무·고위급 협의 진행, 미 해결시 90일 이내 관세 재부과	'비례적 시정조치' 관한 규정																			

장성구 기자 20201116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GYH20200116001100044>)

하지만, 1단계 무역 합의를 했다고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종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 합의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결렬될 수도 있다. 현재의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일시적인 경제적 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정책 중의 하나로서 형태가 아니라 구조적인 미·중 간 패권국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

h=2&searchKeyword(검색일: 2020. 09. 17).



국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시 자신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양국 간의 무역전쟁 역시 이 세계질서의 취약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기존 신자유주의 시대의 세계질서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만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⁵²⁾

미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 팬데믹)을 몰고와 경제를 마비시킨 ‘코로나 19’ 사태는 중국의 책임이라고 규정 짓고 지난 2020년 4월 30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것으로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에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중국에 1조 달러(약 1224조 원) 규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⁵³⁾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며 압박을 하게 되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0년 8월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별로 의미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15일 무역합의 이행 등에 대한 미·중 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별다른 진척이 없을 경우 1단계 합의를 종결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합의 파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열세를 보이면서 ‘미·중 무역합의’를 흔들며 자신에게 유리한 ‘대선 어젠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⁵⁴⁾

표면적으로 보자면 관세인상과 양국 간의 현실주의적 패권경쟁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모두 ‘코로나 19’ 자체를 무역전쟁의 공격과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코로나 19 책임론’으로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역 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 카드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와 방역체제의 취약성이 대두되면서 패권국의 빈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전략적 대응의 수단으로서 ‘코로나 19’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 19’ 확산 이후 보건협력으로 많은 도움을 준 국가들에게 미·중 간 무역전쟁에서 결정적인 순간 중국 편들기를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도 있다.

52) 구분우. 2020. 미중 무역분쟁과 지구적 가치사슬 : 지적재산권 체제의 동요. 경제와사회, (125), 40-48.

53) 하태균. 2020. “트럼프, 중국에 ‘코로나 관세’ 부과 가능성 열어놨.”
<http://www.newscap.co.kr/m/view.php?id=45499>(검색일: 2020. 9. 15).

54) 김영필. 2020. 트럼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별로 의미없어”.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JCCZ77R>(검색일: 2020. 9. 16).



2)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홍콩 피난처법'

중국이 2020년 6월 30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만장일치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했다. 홍콩 주권 반환일인 다음날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하게 된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거나,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하거나, 내정에 외세가 간섭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어떤 행위가 분열·전복·파괴·침투에 해당하는지는 중국 정부의 해석에 달렸다. 앞으로 홍콩의 기존 법과 충돌할 때 홍콩 보안법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홍콩에 새로운 보안법 전문 부서를 설치하고 이 부서가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보안법 부서는 홍콩 내 학교의 국가보안 관련 교육에도 개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홍콩 내 별도의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수립해 보안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물론 중국이 지정하며, 홍콩 행정장관이 보안법 관련 재판의 재판관을 직접 지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조치는 홍콩의 사법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코로나 19' 팬데믹이 중국에게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19'는 중국의 리더십 스타일을 부상하게 만들었고, 홍콩의 자치권 악화가 당겨질 수 있도록 중국의 '코로나 19'가 촉매제 역할을 하며 중국이 공개적으로 홍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수차례 홍콩보안법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홍콩 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실패했다. 이후 '코로나 19' 사태를 틈타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행보를 잠시 주춧한 사이에 중국이 그동안 못해왔던 홍콩, 대만,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을 통해 홍콩 내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혼란 요소를 더 강하게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민주적 시위는 사실상 제한되고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이 누리던 자유는 억압받을 것이란 비난이 거세다. 홍콩 보안법의 전문은 2020년 6월 30일 오후 11시 법이 시행된 후 공개됐다. 홍콩 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전복하거나, 테러 활동을 하거나, 외국 세력과의 결탁할 시 최소 3년,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에 처할 수 있다.
- 홍콩 지방 정부나 중국 중앙 정부에 대한 혐오 조장은 29조에 따라 범죄 행위로 분류된다.
- 대중교통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테러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동안 홍콩 시위대는 자주 도시의 인프라를 공격해왔다.
- 보안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이는 앞으로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 중국은 홍콩에 새로운 보안 부서를 설치하고 자체 인력을 편성한다. 보안부서가 하는 업무는 홍콩 지방 관할권에 소속되지 않는다.
- 홍콩 행정장관은 보안법 관련 재판의 재판관을 직접 지명할 수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배심원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홍콩 지방 당국이 세운 국가보안법위원회가 내린 결정에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중국은 "매우 심각한" 사건에 대해 기소권을 가질 수 있다. 일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 외국 비정부기구와 언론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 38조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비영주권자에게도 법이 적용될 수 있다.
-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홍콩 '캐리 램' 행정장관은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자 "국가 안보 체계의 '큰 구멍이 메꿔졌다.'" 고 평가하며 다만 자신이 아직 법안의 세부적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테드 후이' 야당 의원은 BBC에 "우리는 권리를 빼앗겼다. 자유도 사라졌다. 우리의 법, 사법독립이 사라졌다." 고 언급했다. 홍콩 내 민주화 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즉각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속적으로 해산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이번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에 홍콩 보안법 제정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홍콩에서 발생한 많은 시위에 대한 내용이 새로운 보안법과 함께 국가 전복 혹은 분열 행위로 분류됐다. 이는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처벌강도가 적용된다. 현재, 많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 정치, 자유, 민주주의 등에 대한 언급을 아예 중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체포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⁵⁵⁾

미국은 이에 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유례를 찾기 힘든 폭압적 제도라고 항의한다.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2020년 6월 30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시행은 홍콩 반환협정 당시 중국과 영국 간 공동선언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즉각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 당국이 홍콩에 '한 국가, 한 체제' 기조를 적용한다면, 미국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 의회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이 함께 주도하여 '홍콩 피난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정치적 탄압을 받을 위험에 처한 홍콩 주민에게 미 국무부가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홍콩 시민이 자국이나 제3국에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며 홍콩 보안법의 탄압 아래서 저항에 나서는 홍콩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시민권 발급 등을 통해 정치적 팬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 이후 글로벌 리더십이 하락하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 수단으로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숨은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⁵⁵⁾ bbc뉴스, 2020. 7. 1. "홍콩 보안법 어길 시 최고 무기징역... 구체적 내용 살펴보니"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3245362>



3) 미국의 ‘화웨이’ 고립작전

미국은 중국 통신기업에 대한 압박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규제는 201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우선 화웨이가 만든 통신장비에 보안 관련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은 중국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써서 스파이 행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6월 3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중싱통신)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공식 지정했다. FCC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위원회 산하 공공안전·국토안보국이 화웨이와 ZTE 및 이들의 모회사, 계열사, 자회사를 미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업체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CC의 83억 달러 규모 보조금인 보편적서비스펀드(USF)에서 제공한 자금은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압도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화웨이와 ZTE를 미국 통신네트워크와 5세대 네트워크(5G) 미래에 대한 국가안보위험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⁵⁶⁾

이후, 구글이나 마이크로, 인텔, 퀄컴 등 미국 아이티 기업은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보안을 명분으로 중국으로부터 5G 통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스마트무인공장 IOT 생활가전제품 등은 ‘4차 산업’ 이라고 일컬어지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이 5G 이기 때문에 첨단산업 패권을 중국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조치이다. 지금의 인터넷이 개발된 곳이 미국이고 CPU 1위 미국 인텔, OS 1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포털검색 1위 미국 구글, 휴대폰 핵심 AP및 통신칩 1위 미국 퀄컴, 포털동영상 1위 미국 유튜브 등 핵심 통신 분야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화웨이를 필두로 미래 4차 산업의 핵심인 5G 통신장비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려는 것에 대한 미국의 견제인 것이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 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 부분에서 적절히 활용했다고 평가 받고 있는데, ‘귀 핑’ 화웨이 회장은 한국이 코로나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 그 배경으로 “GPS(위치확인시스템), 로밍데이터를 이용해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고, 정부가 이런 앱 사용을 장려한 것 등이 초기 바이러스 확산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화웨이는 네트워크, 클라우드, AI(인공지능), 기기 등을 활용해 기업들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이라고 덧붙이면서 5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화웨이는 ‘코로나 19’ 사태를 5G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여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 19’를 수단으로 5G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멈추지 않고 ‘중국 때리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최근까지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고립시키고 경제 부상을 막기 위해 제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살펴보겠다.

⁵⁶⁾ 조민성. 2020. “美 FCC “中 화웨이·ZTE는 국가안보 위협” 공식 지정.”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701/101767650/1>(검색일: 2020. 9. 10).



2020년 5월 15일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전문기업인 TSMC는 미국 연방정부와 애리조나주로부터 지원을 받아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SMC에 따르면 애리조나에 만들어지는 5나노 파운드리 시설은 월 2만개의 반도체용 실리콘웨이퍼를 생산한다. 이 부문에 향후 9년 간 120억 달러가 투입된다. 1,600개 이상의 첨단 전문직 직접 고용과 수천 개의 간접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공장은 내년에 착공해 2024년에 생산을 목표로 한다. TSMC는 “신설되는 시설을 통해 고객과 파트너에 대한 지원이 더욱 원활할 것이며, 세계적인 인재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선두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 최첨단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미국 반도체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TSMC의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은 1년 넘게 구설에 올랐다. 미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초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현지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최첨단 기술을 장악하고 중요 산업을 통제하려는 시점에 이번 거래는 미국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⁵⁷⁾

세계 1위 대만 실리콘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5나노 공정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도 있었지만 TSMC 측에서도 대만 싱가포르 중국 외에 위험 분산 차원에서 공장을 분산시킬 생각을 갖고 있었다. 반도체는 국방은 물론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데,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즉, 제조업에서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과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최첨단인 7나노 공정은 애플의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의 APU(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국방용 요격 미사일의 고속 컴퓨터의 프로세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인텔이나 퀄컴의 칩이 중국의 군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기술은 워낙 복잡하고 집적도가 높아 팹리스(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반도체 업체)와 파운드리(조립생산 전문 업체)로 나뉘어져 있다. 최첨단 제조 기술은 중국에는 없지만 중국의 팹리스 업체는 최첨단 프로세스 칩을 설계할 수 있다. 중국에서 최첨단 칩을 설계해 대만에서 제조하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때문에 TSMC의 최첨단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고자 했다. 중국 1위 팹리스 반도체 업체인 하이실리콘에 TSMC 생산능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하이실리콘은 2020년 1분기 세계 10대 반도체 업체 반열에 오를 정도로 성장했다. 하이실리콘은 화웨이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지금은 스마트폰의 APU 설계나 5G통신의 모뎀을 설계하고 있다. 이 기술들은 언제든지 군용 컴퓨터에도 전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한 것은 미국에 파운드리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었다. 반도체를 아무리 설계해도 그에 맞는 제조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칩이 가능하다. 특히 TSMC는 대만에 있어 중국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홍콩은 중국에 반환될 때 50년 독립 체제를 보장받았지만 현재 자유

⁵⁷⁾ 양대규, 2020. “美 애리조나에 5나노 공장 설립하는 TSMC, 파운드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43>(검색일: 2020. 09. 02).



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TSMC는 특히 애플 등 미국 기업의 제품 생산을 위한 반도체 최대 공급사이기도 하다. TSMC 공장의 유치는 미국으로서는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가 미국에도 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분업을 무시하고 설계와 제조의 수직통합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설계기술도 제조기술도 모두 늦어지고 말았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반도체 제품을 화웨이 및 하이실리콘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화웨이 산하 하이실리콘이 TSMC에 제품 생산을 의뢰해도 TSMC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사용하면 하이실리콘에는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TSMC로서는 고뇌의 선택이며 이를 감안해 미국에 공장 건설을 결의한 것이다.⁵⁸⁾

여기서 중요한 것은 TSMC 공장을 미국 내 유치하는 타이밍이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로 가는 반도체 공급을 차단시키는 제재를 발표하지 사흘만에 화웨이가 대만의 TSMC에 7억달러(약 8600억원)어치의 반도체를 긴급 발주하게 되는데 결국 거래는 중단되게 된다. 이후,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달러(약 14조 7600억원)를 들여 5나노 공정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하게 되고, 미국 상무부는 또 다시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게 된다. 미국의 반도체 자급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디커플링시키려는 전략이 새로운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8월 미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의 기술과 장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모든 반도체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화웨이에 팔 수 있다고 밝히고 발효 시점을 이달 9월 15일부터로 공식 선언했다. 미국의 마이크론과 타이완의 미디어텍 등 글로벌 업체와 국내 업체들은 미국 정부에 거래 허가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⁵⁹⁾

이렇게 미국의 중국 경제 제재 조치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화웨이는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SMIC에 22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하고, 화웨이는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이 나서 최고급 인재를 영입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천재소년 프로젝트’를 가동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첨단기술 경쟁에서 중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렇게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9월 8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외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국 반도체

⁵⁸⁾ 조민성. 2020. “[글로벌-Biz 24] 대만 TSMC가 미국 공장 설립하는 이유는?.”
[https://news.g-eneews.com/view.php?ud=2020051918263129226336258971_1&ssk=2017011301560109486_1&md=20200520144236_R\(검색일: 2020. 9. 10\).](https://news.g-eneews.com/view.php?ud=2020051918263129226336258971_1&ssk=2017011301560109486_1&md=20200520144236_R(검색일: 2020. 9. 10).)

⁵⁹⁾ 이지은. 2020. “美 추가제재 15일 발효...삼성·SK,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 중단.”
[https://www.ytn.co.kr/_ln/0102_202009092225107416\(검색일: 2020. 9. 10\).](https://www.ytn.co.kr/_ln/0102_202009092225107416(검색일: 2020. 9. 10).)



업체를 뒤흔든 미국에 대한 불만 제기인 것이다. 앞서 주요 외신에서는 미국 행정부는 SMIC를 거래 제한 기업(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SMIC가 자국 국방부와의 협업이 추정된다는 이유에서다. SMIC는 중국 최대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다. 미국 제재로 화웨이가 대만 TSMC와의 거래가 끊기면서, 중국 정부는 SMIC 육성에 집중했다. SMIC는 국가집적회로(IC)산업 투자펀드와 상하이집적회로펀드로부터 총 22억 5000만달러(약 2조 7758억원)를 투자받았고,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10년 법인세 면제도 예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미국이 'SMIC 때리기'를 예고하면서, 중국 반도체 굴기가 흔들리게 됐다. 오는 15일부터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이용해 개발·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납품할 수 없다. 어플라이드, 램리서치, KLA 등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반도체 제조사는 없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제재가 사실상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를 전면 금지하는 수준까지 격상됐다. SMIC까지 영향권에 들 경우, 중국 반도체의 손발이 묶이게 되는 셈이다. 내부적으로도 사고가 터졌다. 우한홍신반도체 제조(HSMC)가 자국 정부마저 속이고, 20조원이 넘는 지원금을 '꿀꺽'한 탓이다. HSMC는 지난 2017년 설립된 회사로서, 당시 7나노 이하 반도체를 제조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확보했다. TSMC 임직원을 다수 영입하며, 선단 공정 구축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현시점에서는 성과가 없다. 오히려 자금 부족으로 생산 및 연구개발(R&D) 시설 공사가 중단됐다. 자금 조달이 멈춘 이유는 HSMC가 환경 영향 보고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탓이다. 현재 공동 창업자의 행방은 묘연하고, 보유하고 있던 극자외선(EUV) 장비는 구식 제품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에서는 페이퍼 컴퍼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중국은 오는 2025년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점유율은 15.7%다. 목표 달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내외적인 악재로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화웨이 본격 제재까지 7일 남은 가운데 중국 반도체 업계는 충격에 휩싸인 상황"이라며 "SMIC 제재가 현실화되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⁶⁰⁾

4) 미·중 남중국해 군사적 대립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중요한 지리적 조건과 막대한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해역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는 자국 경제의 생명선인 원유 수송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임과 동시에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중국해의 장악은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필수적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에게도 지속적인 남중국해 제해권 유지를 통해 중국의 동중국해와

⁶⁰⁾ 김도현. 2020. "美 제재에 사기극까지...악재 겹친 中 반도체."
[https://http://m.ddaily.co.kr/m/m_article/?no=201388/1\(검색일: 2020. 9. 8\).](https://http://m.ddaily.co.kr/m/m_article/?no=201388/1(검색일: 2020. 9. 8).)



서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억제하고, 기존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이익이 존재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남중국해는 동일한 지역을 놓고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국가가 무려 6개국에 이르고 있다.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향권 내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공세적 의지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⁶¹⁾

특히 남사군도가 위치한 남중국해⁶²⁾에서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며, 여러 국가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이하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의 역사적 권리는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의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구단선(九断线)⁶³⁾ 주장도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무효하다. 남사군도의 모든 섬은 섬이 아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및 대륙붕을 주장할 수 없다. 중국의 남사군도 해역에서의 권익 보호 행위는 합법적이지 않다. 중국의 남사군도 해역에서의 권익 보호 행위는 해양환경을 파괴하였다.”고 판정하였다.⁶⁴⁾ 중국은 “이 중재판결이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고, 수용하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중재판결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중국해 문제를 영유권과 해양권익의 문제로 규정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 따라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반응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어도가 위치한 동중국해 분쟁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⁶⁵⁾

과거 미국은 지리적으로는 역외 국가이고 정치적으로는 남중국해 이외의 다른 현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의 표명이나 개입을 자제해온 측면이 있다. 물론 중국이 1990년대 중반에 미스치프 초(Mischief Reef)를 점령한 이후 미국 국무부는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와 안정, 분쟁에 있어서 중립성, 국제적 원칙의 존중이라는 미국의 전통적 입장에 추가하여 항행의 자유라는 조항이 포함되었고, 이는 이후 미국이 지역 내에서 중국의 주장을 견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21세기 초에 미국은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였고,

61) 이은택, 남궁영. 2019.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미·중의 갈등: 공격적 현실주의의 접근.” 『국제관계연구』 2019년 여름호 제24권 제1호(통권 제46호), 81-132.

62) 남중국해는 네 개의 군도와 작은 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음. 네 개의 군도에는 동사군도(东沙群岛), 서사군도(西沙群岛), 중사군도(中沙群岛) 및 남사군도(南沙群岛)가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도 남사군도를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가장 치열함.

63) 중국은 남해제도위치도(南海诸岛位置图)에 아직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지역을 11개의 단속선으로 표시하였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수립 이후 이 단속선을 9개로 표시하였는데, 그 모양이 알파벳 U자와 같다고 해서 U자형선 또는 구단선이라고 불렀음. 중국은 이 구단선을 전통적 경계선으로 간주해 왔음. 김용환. 2008. “중국의 해양경계선과 그 획정 방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해양정책연구. 제23권 1호, 30-31면.

64)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of 12 July 2016, available at <https://pcacases.com/web/sendAttach/2086>(검색일: 2020.1.24.)

65) 유예리. 2020.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한국법정정책학회』 통권 57호, 313-346.



이 때문에 전쟁의 종식 이전까지는 미국의 관심이나 노력이 남중국해에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남중국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전략적 고민을 반영하여 최근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당국자들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이후에 여러 차례 남중국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2월의 미-아세안 회의의 성명을 비롯하여, 같은 해 5월에 있었던 베트남 방문 시에도,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 어디에서든지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국가들의 권리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⁶⁶⁾ 이후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을 준수하는 한 비행과 항해 등 군사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었고,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장관(Ashton Carter), 태평양사령관(Admiral Harry B. Harris Jr.) 등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⁶⁷⁾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2017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직접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한 미국’이 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의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정책 기초를 ‘원칙적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으로 명명하였다. ‘원칙적’이란 의미는 미국적 가치와 원칙(평화와 번영)을 중시하는 것이고, ‘현실주의’란 전통적인 세력경쟁과 강대국 정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구체적인 지역 세력균형의 핵심 키워드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를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안보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자유와 억압의 상반된 국제질서 간에 지정학적 세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및 기지 건설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효과적 통제권을 발휘하려는 노력을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 지역의 중국 기지에서 출동하는 군사력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 access/area denial)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증대(특히 전략원자력잠수함(SSBN: SS-Ballistic missile-N)의 기지로 활용되어)시켜 미국 군사력을 제1도련선 밖으로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것임을 미국은 우려한다. 물론 미국과의 전쟁 시에 미국이 이런 기지와 군사력에 대해 공격을 가할 수는 있지만, 공격에 투여되는 미국 군사력이 한시적으로 이 지역에 묶일 수 있거나 중국의 능력으로 이 지역에 군사력을 전개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중국의 이

⁶⁶⁾ Remarks by President Obama in Address to the People of Vietnam (May 24 2016),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6/05/24/remarks-president-obama-address-people-vietnam>. 원문의 내용은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fly, sail and operate wherever international law allows and we will support the right of all countries to do the same...”이다.

⁶⁷⁾ 2016년 미국 태평양사령관의 언급은 다음과 같은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US must conduct more South China Sea sails to contest Chinese man-made islands,” <https://www.stripes.com/news/pacom-chief-us-must-conduct-more-south-china-sea-sails-tocontest-chinese-man-made-islands-1.396104>.



지역 내 기지 건설을 통한 지배력의 확보는 심각하게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된다. 예를 들면 인공섬과 기지를 통해 중국은 해역 내 각종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주변 국가들을 압박할 수 있으며, 남중국해 상공에 대한 방공식별구역을 강요할 수 있으며, 서태평양지역으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되며, 지역 패권국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하여 중국의 이런 능력은 미국이 대만위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일본, 필리핀 및 한국과의 동맹 조약을 준수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서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중국이 지역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는 미국의 능력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미국은 이해한다.⁶⁸⁾

다른 한편으로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적극적 대응 또한 중국의 행보와 결합하여 지역 내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세력균형이론의 이런 주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행동을 잘 요약해주고 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재균형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위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균형을 취하지 않으면 이 지역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중국의 상대적 부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실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국력 격차도 축소되고 있어서 중국이 미국 주도의 현존 질서를 어느 수준에서 감내할 것인지가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국제정치의 세력전이론의 비관적 전망처럼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불만을 고조시킨다면 중국의 행동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미국이 해양질서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추진한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여서, 당분간은 법과 제도에 의한 안정성의 확보는 힘든 상황이다.⁶⁹⁾

중국은 현재 '코로나 19' 사태를 이용하여 남중국해 장악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 4월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남중국해 도서에 추가 행정구역을 설치했다. 우디섬(중국명 용흥도<永興島>, 베트남명 푸럼)을 중심으로 한 시사구는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양사 군도)와 맥클스필드 군도(중국명 중사군도<中沙>군도)의 섬과 암초 및 해당 해역을 관할한다. 또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용수자오<永暑礁>)를 중심으로 한 난사구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 베트남명 쯔엉사군도)의 섬과 암초 및 해당 해역을 각각 관할한다. 중국은 2012년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의 반발 속에서 남중국해 주요 섬과 암초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인 썬사시를 출범시켰다. 이번에 썬사시 산하에 구(區)급 행정구역을 추가로 둔 것은 마찬가지로 이들 섬과 주변 수역이 중국의 관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South China Morning Post)는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섬 장악력 강화에 나섰다"며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의

⁶⁸⁾ O'Rourke, Ronald. 2018. "China's Actions in South and East China Seas: Implications for U.S. Interest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August 1).

⁶⁹⁾ 고봉준. 2019. "남중국해와 미국의 선택 : 지속과 변화." 『한국지방정치학회』 통권 16호, 1-26.



긴장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남중국해에서 강력한 견제 세력인 미국의 존재감이 약해지자 중국이 남중국해 도서 장악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2020년 4월 19일 홍콩 SCMP)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전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이난성 쑤사(三沙)시 산하에 시사(西沙)구와 난사(南沙)구를 각각 둔다는 공고문을 올렸다.⁷⁰⁾

또한, 중국은 '코로나 19'를 수단으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던 필리핀에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트럼프'란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거침없기로 정평이 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받으려고 남중국해를 중국에 내주는 굴종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0년 7월 국회 국정연설에 나선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의 '코로나 19' 백신 구매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유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의 소유를 인정하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대통령이라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언급하며, 중국 정부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 국면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뜻밖의 친중 행보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웬빈은 "두테르테 대통령 발언을 평가하고, 해양분쟁의 적절한 처리, 남중국해 내 평화·안정 위한 우호적 교섭을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받으려고 필리핀이 분쟁 해역을 중국에 내주는 선택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내 '법의 지배'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⁷¹⁾

이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19' 사태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남중국해 문제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고, 경제와 안보, IT, '코로나 19' 등을 둘러싸고 전방위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전략경쟁이 아닌 군사적 갈등까지 야기되는 패권경쟁의 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018년 10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함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로부터 약 2년이 흐른 현재 남중국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7월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벌이자 맞대응으로 미국은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니미츠호를 투입시켜 남중국해에서 동시에 훈련을 강행한다. 군사적 충돌도 가능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동아시아에 초긴장 상태를 형성하게 되는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대치할 경우 선제사격을 하지 말도록 군에 지시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다.

70) 차대운. 2020. "중국, 코로나19 혼란 외중 남중국해 장악력 강화 행보."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9029400089>(검색일: 2020. 9. 15).
71) 박철원. 2020. "필리핀, 코로나 백신 받으려고 중국에 남중국해 양보?"
https://www.ytn.co.kr/_ln/0104_202007290724342132(검색일: 2020. 9. 15).



Ⅳ. ‘코로나 19’ 사태 후 미·중 경쟁

1. ‘코로나 19’ 사태 이후 미·중 경쟁 구도 변화

‘코로나 19’ 사태는 미·중 긴장관계가 최고조로 악화된 시점에 발생하게 되었다. 두 나라는 이후 패권경쟁의 초입 양상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견제를 해오다가 결국 1차 무역협정엔 동의했지만, 양국 간의 외교안보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못했다. 현재 양국 모두 아시아태평양에서 발생 가능한 충돌에 공개적으로 대비하면서 언제 발사될지 모르는 충돌에 대한 호흡 고르기를 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 위기는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의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리더십을 검증받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가 미·중 간 협력을 증진시킬지 아니면 오히려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지는 향후 미·중 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⁷²⁾

여기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세계가 정상화 되었을 때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미·중 경쟁구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권경쟁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 간에 어떤 국가가 어떤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분야 리더십 부재와 방역체제의 취약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는 낮아질 것이고, 반면 보건협력의 수단으로 ‘영향권 전략’을 추진했던 중국은 제한적이지만 주변국의 지지를 받으며 ‘일대일로’ 사업에 가속화를 추진하는 등 지금보다 더욱더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방역모델, 지구적인 보건공공재 제공에서의 우위를 중국이 점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군사 패권이 상당 부분 약화되는 안보환경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과 경쟁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기존의 대중국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바이든의 ‘미국의 리더십 복원과 동맹 재건’에 대한 상반된 공약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패권역할에 대한 지지도가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실추를 경험했고, 중국의 부상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차기 대통령도 중국과의 경쟁구도는 피

⁷²⁾ 강수정, 2020,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 분석: 2010년대 미국 싱크탱크들의 미래 전망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2집 1호, 5-37.



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중 어떤 국가가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을 먼저 개발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 19’를 종식 시키는데 공헌을 하게 되느냐? 또는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게 된 보건 협력의 중요성을 미·중 양국 간에 어느 국가가 WHO와 협조하여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세계 보건질서를 책임지는 리더십을 발휘 할 것인가? 이후 보건질서를 책임지는 국가에서 어떤 ‘영향권 전략’을 추진하느냐? 등의 필수 조건에 따라서 미·중 패권양상과 양국의 안보환경에는 많은 변수를 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되면 중국의 경제 건설은 초토화된 세계 경제를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중국이 패권의 역할에서 압도적으로 앞선다면 미·중간 새로운 세력편차가 발생하거나 미국이 패권의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코로나 19’ 초기 대응 실패, 자국 내 전파 우려에 입국 금지를 추진한 ‘락다운’, ‘코로나 19’ 사태로 공지에 물리자 감행한 ‘울프 워리어’ 외교접근법, 홍콩보안법 등에 대한 인권문제 등 진정한 패권국가가 되기에는 이념적, 규범적으로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즉, 패권국가의 능력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가적으로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며, 패권국으로서의 기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빨리 오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중국이 이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분주하게 보여 지고 있지만 강대국이 될 수는 있으나, 진정한 패권국으로서 자리매김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여전히 9%포인트(p) 이상 지지율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미국 내에서 실시된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데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전국 지지율이 51.6%로 트럼프 대통령(42.1%)을 9.8%p 앞서고 있다. RCP 분석에 따르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달 30일(바이든 후보 49.7%, 트럼프 대통령 43.1%)과 비교했을 때 3%p 넘게 더 벌어졌다. 이에 대해 RCP는 지난달 29일 실시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간의 제1차 TV토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⁷³⁾

현재 추세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바이든의 공약대로 미국의 경제력이 회복되고 ‘리더십 복원과 동맹 재건’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다시 패권국가로서의 영광을 찾을 것이고, 부상하는 중국과는 기존 전략적인 경쟁구도로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⁷³⁾ 동아닷컴. 2020. “바이든 전국 지지율 51.6%…트럼프와 9.8%p 격차”.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011/103349385/1>(검색일: 2020. 10. 16).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동맹전략 발전 방향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보건질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며,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19'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WHO 수석과학자 '소우미야 스와 미나탄'이 "확실히 아스트라제네카 물질이 가장 개발 단계 진행이 빠릅니다. 아마 가장 앞서 있는 백신 후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라고 발표하자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4개국은 '코로나 19 백신 동맹'을 결성해 아스트라제네카사와 4억 명분의 '코로나 19' 백신 공급 계약을 이미 맺은 상태이다. 임상시험이 완료되지도 않은 개발이라도 완료 후를 예상해 사재기를 하는 양상이다.⁷⁴⁾

이런 시국에 중국은 이미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다른 국가에 보건 방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미래 국제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중이다. 현재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신속진단키트, 증상에 준한 환자진료 공간 차별성 등 한국식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뜻하는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하며, 중국이 힘닿는 데까지 돕고 한국의 방역을 지지하겠다고 전했으며, '코로나 19' 안정화 후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방역체계 모범국가 1순위의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외교적 이미지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이슈를 불러올 수 있다. 가령, 한국이 중국의 방역 시스템이나 보건질서에서의 국제적 리더십을 칭찬이라도 한다면 파급 효과는 굉장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증폭되면서 자국의 우군을 만들기 위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 전략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은 일본과도 연대를 형성하면서 우군 만들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패권국으로서의 리더십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지만 한국에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동맹관계이다. 이런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한·미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좋을 것은 없다는 의견도 많은데 한국은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기존의 동맹전략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면, 미·중 전략 경쟁이 점점 격화 될수록 남북관계 특히 비핵화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미·중 양국의 당면과제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이 명확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이슈는 실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핵화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어느 국가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국

⁷⁴⁾ 김상우, 2020. "코로나19 백신 동맹'에 사재기까지...각국, 선점 경쟁 치열"
https://www.ytn.co.kr/_ln/0104_202006280800316401(검색일: 2020년 9월 14일)



제 레짐을 넘어서서 지원해 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소극적인 여러 시도를 할 수밖에 없고 '자력갱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자신의 어떤 안전망과 같은 수단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핵무기를 더욱더 손에 움켜쥐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환경에 미국이 한국을 배척하여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거나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도 무관심하게 반응하고 방종 한다면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도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시진핑 주석 방한은 경색된 남북 관계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대남 정책에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시 주석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남북 간 긴장감이 누그러지는 물꼬가 될 수 있다.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만큼, 이번 방한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지지를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限韓令)도 해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 시도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시 주석이 한국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사드를 비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으며, 중국의 한국산 문화 콘텐츠 제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도 있다. 중국이 한국을 우군으로 얻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무엇인가를 한국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은 기존의 전통적인 동맹전략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편 가르기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경우의 수에 한국에 이점이 더 많은지 분석하여 한쪽에 기울어 질 것이 아니라 격동하고 있는 미·중 관계에 있어서 미·중 양국이 한국에게 우호적으로 외교적인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는 단순한 백신 동맹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동맹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윤주. 2018. “서방가치의 분열...G7 공동성명 뭉개버린 트럼프.” 『한국일보』, 6월 10일.
- 권유진. 2020. “첫 개발국이 패권 잡는다, 미·중·EU ‘백신 전쟁,’”
<https://news.joins.com/article/23778932>(검색일: 2020. 5. 18).
- 김도현. 2020. “美 제재에 사기극까지...악재 겹친 中 반도체.”
https://http://m.ddaily.co.kr/m/m_article/?no=201388/1(검색일: 2020. 9. 8).
- bbc뉴스. 2020. 7. 1. “홍콩 보안법 어길 시 최고 무기징역... 구체적 내용 살펴보니”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3245362>
- 상수. 2009, 『중국현대사: 공산당, 국가, 사회의 격동』. 서울: 심산, 274-275.
- 송민근. 2017.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국제 통상환경 및 물류거점간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연구.” 인
천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양대규. 2020. “美 애리조나에 5나노 공장 설립하는 TSMC, 파운드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43>(검색일: 2020. 9. 02).
- 유립신. 2020.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창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이정남. 2018. “시진핑(习近平)의 중국몽(中国梦)”. 『아세아연구』, 61(4), 165-192.
- 이지은. 2020. “美 추가제재 15일 발효...삼성·SK, 화웨이에 반도체 중단.”
https://www.ytn.co.kr/_ln/0102_202009092225107416(검색일: 2020. 9. 10).
- 정혜영. 2020. “중국의 지정학과 동남아 네트워크 협력구상: 대륙부·해양부 동남아국가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4(1), 101-136.
- 조국봉. 2020. “미중 갈등의 현실주의적 요인과 미래 관계.” 동아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조민성. 2020. “美 FCC “中 화웨이·ZTE는 국가안보 위협” 공식 지정.”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701/101767650/1>(검색일: 2020.
9. 10).
- 조민성. 2020. “[글로벌-Biz 24] 대만 TSMC가 미국 공장 설립하는 이유는?”
[https://news.g-ews.com/view.php?ud=2020051918263129226336258971_1&ssk=
2017011301560109486_1&md=20200520144236_R](https://news.g-ews.com/view.php?ud=2020051918263129226336258971_1&ssk=2017011301560109486_1&md=20200520144236_R)(검색일: 2020. 9. 10).
- 주평 저·이상원 역(2012). 『국제관계이론과 동아시아안보. 성남: 북코리아, p.534.
- 한석희. 2004. “중국의 부상과 책임대국론.” 『국제정치논총』, 44(1),
- John J. Mearsheimer. 2006.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105(690), 160-162.
- Hochul Lee. 2012. pp.26-27.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8. “Global Trends 2025 : A Transformed World”,
https://www.dni.gov/files/documents/Global%20Trends_2025%20Report.pdf(검색일:



2020. 09. 10).

“习近平在印尼国会发表演讲：携手建设中国－东盟命运共同体”，中國一帶一路網, 2013.

百度百科. 20116. “文化大革命,” <http://baike.baidu.com/view/1921.htm>(검색일: 2020. 09. 07).